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안내서

**A Guidebook for Migrant Workers
: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Injuries and Deaths)**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안내서

**A Guidebook for Migrant Workers
: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Injuries and Deaths)**

2025.11.19.

(사)김용균재단

경제인의몫소리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November 19th, 2025

Kim Yong-gyun Foundation

The Third Voice Research Institute

Dasan Human Rights Center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Labor Committee

차례

1

안내서를 만든 이유

| 8

2

산재제도에 대한 이해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 18

②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 20

③ 산재보험 신청 | 24

3

사고사망 대응

① 일반적 진행과정 | 30

②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 54

③ 동료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 74

④ 연대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 82

⑤ 그 외 고려사항 | 98

4

사고치료 대응

① 산재사고 발생 시 대응 | 108

② 산재 신청절차와 준비 | 114

③ 산재 치료가 끝난 후 대응 | 122

Table of Contents

Why This Guidebook Was Made | 9

1

Understanding the Industrial Accident System

2

- ❶ When Doe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y? | 19
- ❷ Who Is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21
- ❸ Filing a Claim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25

Responding to Fatal Accidents

3

- ❶ General Procedure | 31
- ❷ Response from the Bereaved Family's Perspective | 55
- ❸ Response from Coworkers' Perspective | 74
- ❹ Response from Supporters and Solidarity Organizations | 83
- ❺ Other Considerations | 99

Response to Accident Treatment

4

- ❶ Response When an Accident Occurs | 109
- ❷ Procedures and Prepar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laims | 115
- ❸ After Treatment Ends | 123

- * Contact Information – Organizations Providing Support | 129
-



1

안내서를 만든 이유



1

Why This Guidebook Was Made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이라는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였던 위험한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참사로 23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참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전 대책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아리셀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한번은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갈수록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일부 업종은 이주노동자 없이 사업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투여한 시간 대비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야 하기에, 더 많이 더 빨리 일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업 방식, 일터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빨리빨리’는 적응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윤 중심의 구조가 이주노동자를 위협으로

On June 24th, 2024, a fire broke out at the Aricell lithium-battery factory in Hwaseong, Gyeonggi Province, shocking our society. Lives were lost in a workplace that valued profit over human life. Twenty-three people died, and among them, eighteen were migrant workers. The tragedy revealed how dangerous migrant workers' labor conditions are—how they toil in places without safety measures. Yet this problem is not confined to Aricell. It is the problem that virtually every migrant worker in South Korea faces at some point.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continues to grow. Many are employed in agriculture, fisheries,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ome industries cannot operate without them. They make indispensable contributions to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yet their safety and labor rights are ignored. Why does this keep happening? The reason lies in Sou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which prioritizes profit above human life. Because it must generate profit relative to the time invested, workers are pushed to work more and faster. This culture of “ppalli-ppalli” (“hurry-hurry”) is difficult to adapt to for migrant workers unfamiliar with South Korean work practices and environments. This profit-centered structure places migrant workers directly in harm's way.

이끌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경제 격차가 있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돈을 받고 일하러 왔다는 이유로 차별이 당연시됩니다. 이런 차별의 문제는 일터의 안전과 연결되어, 돈을 벌러 왔으니 감당해야 할 문제처럼 이야기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억울한 일을 겪어도, 위험한 상황이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한국국적 노동자와 같은 조건이라 해도 이주노동자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 '이주'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문화적 조건, 언어 등이 태어난 곳과 다른 곳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일상에서든 일터에서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발생했을 때도 나타납니다.

산재 관련 정보와 제도,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조건이 달라지는 것에서 오는 불이익, 일을 못하게 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요구하기 망설여집니다. 특히 가족이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들은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에게 교육과 안내가 부족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거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문제입니다.

Another cause is structur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laborers. Discrimination has been normalized on the dubious reason that the migrant workers come from economically less-developed countries, that their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differ, or that they are people here to earn money. This discrimination translates directly into unsafe working conditions: the hazards they face are portrayed as inevitable risks that migrants must simply endure because they came to make money. As a result, even when migrants experience injustice or danger, they cannot easily speak out or claim their rights.

Even when migrants and South Korean nationals work under identical terms, migrant workers are at greater risk simply because they have migrated. Having left the country in which they were born, it takes time, both in daily life and work, for migrant workers to adjust to different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linguistic conditions. When industrial accidents occur, these same vulnerabilities resurface.

Due to difficulties in accessing information about industrial-accident systems and procedures and differences in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migrant workers cannot respond appropriately when accidents occur. Fears over losing their job, being forced to return home, or facing disadvantages depending on visa type, etc., further discourage them from asserting their rights. Especially when migrant workers die from industrial accidents, families back in their home countries face even greater difficulties in responding.

However, these are not merely personal misfortunes. They reflect institutional failur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ccepted migrant labor for industrial development without providing adequate education, guidance, or systems to protect those workers once they arrive.

Industrial accidents range from minor injuries to life-threatening events that rob people

산재는 경미한 사고에 그치기도 하지만 건강과 생명을 잃는 큰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선택입니다. 산재는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모른다고 포기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김용균재단,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재를 겪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대응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안내서>는 사고성 재해만을 다루었습니다. 일터의 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인해 얻게 된 질병도 중대재해지만 질병마다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도 다르고, 표준화된 안내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고성 재해에만 초점을 맞춰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고성 재해 외에도 산재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연대단체의 연락처는 안내서 맨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익숙한 나라를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용기를 내어 국경을 넘고, 이주한 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위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 용기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한 곳의 정부는 이주해 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는 제도적인 보호방안이 부족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신과 차별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연결되어 위험은 더 커지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에서 중대재해

of their health and lives. In every case,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choice of the worker and their family themselves. A workplace injury or death directly concerns one's life and safety; it is not a decision for someone else to make on their behalf. For that reason, no one should give up or hesitate simply because they lack information. They must act, demand their rights, and find a way forward.

With this in mind, the Kim Yong-gyun Foundation, the Third Voice Research Institute, the Dasan Human Rights Center, and the Labor Committee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jointly created this guidebook. The guidebook focuses specifically on accidental injuries and deaths. Occupational diseases caused by working conditions are also serious, but since each illness has different causes and requires different investigative standards, creating a standardized guide is difficult. Therefore, this edition centers on accident-type disasters. At the end of the booklet, however, you will find contact information for organizations that can assist with all types of industrial-accident issues.

Leaving one's home country for an unfamiliar place is never an easy decision. Migrant workers cross borders with courage, working for their dreams, their families, and the industries and economies of the countries to which they migrate. That courage moves the world. The governments of host countries have a du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workers who come to their countries. It is their basic responsibility. Yet in South Korea, institutional protections remain insufficient, and distrust and prejudice against migrant workers persist. These structural problems compound risk, endangering migrants' lives and safety.

This guide is intended to help migrant workers find direction and support when facing a major industrial accident within South Korea'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which often fail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The following chapters explain general procedures for

라는 위기에 막막할 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산재의 일반적 대응 절차와 사망 사고 발생시 유족, 동료, 조력자·연대자의 대응, 부상 사고 대응을 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연대 단체를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이 안내서가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how families, coworkers, and supporters can respond in cases of death or injury, and how to obtain help from solidarity organizations. We hope that this guidebook will help improve the lives and labor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Thank you.



2

산재 제도에 대한 이해

-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 18
- ②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 20
- ③ 산재보험 신청 | 24



2 Understanding the Industrial Accident System

- ❶ When Doe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y? | 19
- ❷ Who Is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21
- ❸ Filing a Claim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25

1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적용됩니다

일과 관련해서 정신과 신체에 건강상 문제(부상, 질병, 사망)가 발생하는 경우를 산재라고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여 정부(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산재는 사고와 질병, 출퇴근재해가 있는데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재해는 당연히 산재보험 대상이 되고,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이나 체육대회에서 다친 경우, 출퇴근하다가 당하는 교통사고 등 사업주나 관리자의 지시나 관리 중에 발생한 일이거나 작업을 위한 과정이라면 업무상 사유이기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일과의 관련성 여부일 뿐, 근무시간 내외, 작업장 내외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다가, 기숙사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재해 역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 차량을 이용했다면 당연히 적용되고, 걷거나 자전거·오토바이·버스·전철·대중교통·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1

When Doe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y?

An “industrial accident” refers to cases where, in connection with work, problems arise in one’s mental or physical health (injury, disease, death). The insurance that one applies for to the government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when an industrial accident occurs i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s include accidents, diseases, and commuting accidents. Accidents that occur during working hours are subject to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and even if they did not occur during work,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can apply.

One can file a claim for the IAC Insurance for accidents that occur while performing work, even outside of one’s workplace and working hours. For example, this includes injuries incurred during a company-organized staff dinner or athletic contest, in a traffic accident while commuting, or while under the instruction or control of the employer or a manager. That is, whether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applies depends only on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with work; i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inside or outside working hours, nor inside or outside the workplace. If migrant workers are living in company-provided dormitories and a disaster occurs because of a problem with the dormitory facilities themselves,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also applies.

The same reasoning applies to commuting traffic accidents. If you use a company-operated commuter vehicle, it naturally applies. Even if you commute on foot, by bicycle, motorcycle, bus, subway, public transportation, or a personal car,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applies.

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단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은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가입, 당연가입 해야 합니다. 당연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며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를 안낸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등록노동자도 산재보험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미등록노동자라도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후 생기게 될 출국 문제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경우입니다.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겨 2023년부터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나 계절노동자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가 5인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주 일터에서 일하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거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50% 지원해주고, 노동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Who Is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ll people working in workplaces.
Exceptions for non-corporate sole proprietor agricultural or fishery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IAC Insurance applies to all businesses where at least one person works. Every workplace is legally required to enroll, and participation is mandatory by law.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insurance premiums. Because participation is compulsory, even if the employer fails to pay, workers are still eligible to file a claim for insurance benefits. Even undocumented workers can file a claim. In other words, if an undocumented migrant worker is injured, becomes ill, or dies while working in a workplace where the employer did not pay for insurance,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 can still benefit from the IAC Insurance (Problems regarding deportation after the claim are separate issues).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to mandatory coverage. It does not apply to non-corporate sole proprietor agricultural or fishery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The system was revised in 2023 to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is exclusion. Now, if an employer wishes to hire migrant workers holding an E-8 (Seasonal Worker) or E-9 (Employment Permit) visa at such a workplace, the employer must voluntarily enroll in the IAC Insurance or register for the Farm and Fishery Workers' Safety Insurance (FFWS Insurance). The FFWS Insurance is a precondition for small-scale (under five employees) agricultural or fishery business owners to employ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subsidizes 50% of the premium, and workers do not pay.

Only small-scale (under five employees), non-corporate sole proprietor agricultural or

②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약속을 미리 해놓은 농어업 5인미만 개인 사업장에서만 E8, E9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내에 농어업 인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하도록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농어업 법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fishery workplaces that have pre-confirmed enrollment in this safety insurance may employ E-8 or E-9 migrant workers, and employers must complete the insurance registration within three months of hiring.

If you start working in a non-corporate sole proprietor agricultural or fishery workplace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make sure that insurance registration is completed within three months, and check the insurance policy certific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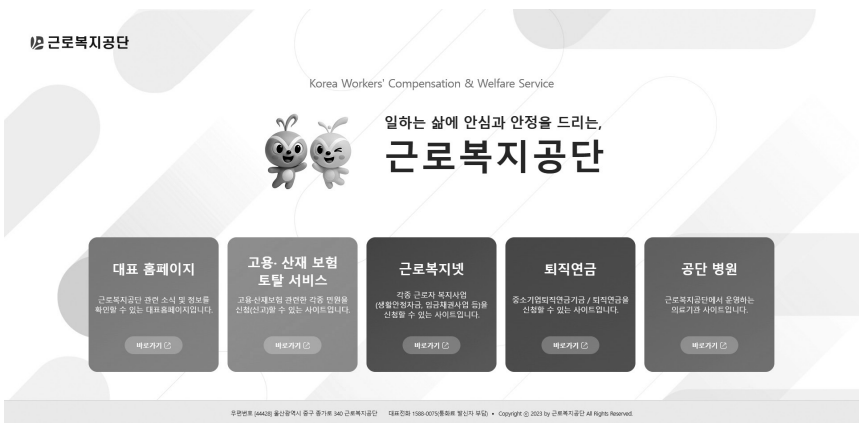
The only workplaces excluded from mandatory IAC insurance are non-corporate sole proprietor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Corporate agricultural or fishery businesses, even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3

산재보험 신청

사망사고 이후 유가족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와 부상치료를 위해 피해당사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하거나 사고현장에 있었던 동료나 트라우마 치료를 신청하는 경우도 산재노동자로 인정받으면 피해당사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전화상담 고객센터 1588-0075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09:00~18:00

3

Applying for a Claim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re are cases where the bereaved family files a claim with the IAC Insurance after a fatal accident, and cases where the injured worker files a claim in order to receive treatment for injuries. If a coworker who witnessed the accident or was present at the scene applies for trauma therapy and is recognized as an industrial-accident victim, they may also file a claim with the IAC insurance through the same procedure as the injured worker.

Filing for an IAC Insurance claim is handl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일하는 삶에安心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 대표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관련 소식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홈페이지입니다.
[바로가기](#)
- 고용·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관련한 각종 민원을 신청(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 근로복지넷**
각종 근로자 복지사업 (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퇴직연금용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 공단 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주관번호 344233 울산광역시 중구 동가동 342 근로복지공단 | 대표전화 1588-0075(통화료 별도) | Copyright © 2023 by 근로복지공단 All Rights Reserved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Consultation Center: 1588-0075. Available Monday to Friday, 9:00 a.m. – 6:00 p.m.; closed on Saturday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③ 산재보험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이주노동자를 위해 본국어로 된 서류 양식이 일부 존재합니다.(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중국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피해노동자의 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피해노동자는 아래의 급여를 산재보험 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간병료,보조기 등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상병보상연금 | 장기 치료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직업재활급여 |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할 때 지급되는 급여

이주노동자, 미등록노동자라고 해도 산재보험 신청 절차상 한국국적 노동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부상치료 중 피해가족들의 입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이거나 법 허용범위를 넘어선 취업일 경우는 치료 종결 후 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가 남은 채 본국 귀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Welfare Service, and it can also be done online. You can use the Employment and IAC Insurance Total Service website. For migrant workers, some of the required forms are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including English, Vietnamese, Indonesian, Filipino, Thai, Chinese, Nepali, Sinhala, Khmer, and Uzbek. In the case of an injured worker, treatment can be received at a designated hospital, and the worker may file for a claim with assistance from the hospital.

The bereaved family may file for a claim for survivor's benefits (either as a pension or a lump-sum payment) and funeral expenses under IAC Insurance.

Workers who are victims of IAC-covered accidents may file for the following types of benefits:

Even for migrant workers and undocumented workers, the procedure for filing an

Medical Care Benefits

(costs of treatment, hospitalization, nursing care, assistive devices, etc.)

Work-Suspension Wage Benefits

(wage-replacement paid for the period you cannot work because you are receiving treatment)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compensation when physical or psychological impairment remains after treatment)

Injury and Disease Compensation Pension

(long-term living support for extended treatment or recovery)

Nursing Care Benefits

(provided when continuous nursing is required even after treatment has ended)

Vocational Rehabilitation Benefits

(support for job training to help the worker return to employment)

IAC Insurance claim is no different from that for South Korean workers. However, in cases involving fatal accidents or medical treatment for injuries, issues may arise concerning the entry of the victim's family members into South Korea. If the worker is undocumented or employed beyond the scope permitted by law, immigration or residence problems may occur after the completion of treatment. There are also issues that require special attention, such as the difficulties that may arise after returning home with permanent disabilities.



3

사고사망 대응

- ❶ 일반적 진행과정 | 30
- ❷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 54
- ❸ 동료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 74
- ❹ 연대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 82
- ❺ 그 외 고려사항 | 98



3

Responding to Fatal Accidents

- ① General Procedure | 31
- ② Response from the Bereaved Family's Perspective | 55
- ③ Response from Coworkers' Perspective | 75
- ④ Response from Supporters and Solidarity Organizations | 83
- ⑤ Other Considerations | 99

1

일반적 진행과정



사망사고 발생부터 재판 마무리까지

사망사고
발생

119신고
경찰신고

현장보존

병원 이송
유가족 연락

유가족확인 | 사망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

- 무연고 장례: 지자체, 대사관에서 관장 가능
- 유가족 장례

부검 | 경우에 따라

회사 | 노동부에 재해조사표 제출

노동부와 경찰 | 사고조사 + 유가족, 동료, 연대자(조력자) 참여 요구

유가족 | 산재신청, 회사측과 피해자측 협상(사과, 배보상, 재발방지책 등)

회사와의 미합의시 민사재판

동료, 연대자 | 사고조사, 협상 등 유가족과 함께 대응

동료 | 사업장 변경, 트라우마 치료 등 검토

장례 | 회사와의 합의 후에도 가능하나 유해송환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판단

형사재판 | 유가족이 본국에 있으면 연대자들 중심으로 대응

1

General Procedure



From the Occurrence of a Fatal Accident to the End of the Trial (Illustrated as a Graphic)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은 신고(119, 회사, 경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119로 가장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 병원 이송 중일때,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게 꼭 작업 중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알고 있는 만큼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 됩니다.

119 출동신고자료, 병원 기록지에 산재사고 발생 일시·장소·경위가 정확히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과 사고조사 과정의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119에 가장 먼저 신고를 하고 회사 담당 관리자에게 알리고 경찰(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도 사망사고를 확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찰과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만, 간혹 사고를 감추기 위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특히 법적 상속권자)에게 상황을 알려주세요

법적 상속권자나 가까운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 병원으로 가도록 전하고 사고 상황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법적 상속권자나 가까운 가족이 한국에 없는 경우는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면 됩니다. 가족이 본국에 있다면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가족들이 입국한다면 믿을 수 있는 통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입국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거나 입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기관이나 특정 인·조직이 가족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으면 됩니다. 권한을 위임받는 이들은 주로 피

Anyone who witnesses an accident or discovers a victim
must report it (to 119, the company, and the police)

There are cases where workplaces attempt to conceal an industrial accident as if it had never occurred.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first to call 119. When calling 119, during transport to the hospital, and upon arrival at the hospital, you must clearly state that the incident occurred while working and explain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as accurately as you can.

It is vital that the 119 dispatch record and hospital medical notes accurately record the time, place, and account of the industrial accident, since these become key pieces of evidence in the approval of the IAC Insurance claim and the accident investigation process.

After first reporting to 119, you should then inform the company's responsible manager and report the incident to the police (dial 112). Normally, when a company becomes aware of a fatal accident, it will also report it to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Labor.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company does not report to conceal the accident.

Inform the victim's family,
especially the legal heirs

If the legal heir or close family members are in South Korea, they should be told to go to the hospital, and the details of the accident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m. If the legal heir or close relatives are not in South Korea, then the family in the home country should be contacted and informed of the situation. If the family is in the home country, it is essential to confirm whether they can enter South Korea.

When family members enter South Korea, a trustworthy interpreter is critical.

If immediate entry is difficult or will take a long time, a person, organization, or institution in South Korea can delegate legal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the family. Those who may be authorized include the victim's other relatives, the embassy, labor unions, related organizations, and sometimes a lawyer or labor consultant.

해자의 또 다른 가족(친척), 대사관, 노동조합, 관련 단체 등이며 변호사나 노무사가 위임을 받기도 합니다.

| 유가족 연결에 따라 달라지는 유해 수습과정과 장례 |

- 지난 2021년 주한 태국대사관이 이주노동자 ○○○씨의 사망소식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가정 형편상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지자체에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의뢰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달된다 해도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면 가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무연고자 장례’를 거치게 된다.
- 사망자의 출신국이 어디인지 확인되면 대사관이나 공동체를 통해 가족을 확인하고 찾게 된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같은 국가 출신의 누군가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임받을 때는 화장 또는 시신송환에 대한 유족의견을 확인하고 유해를 수습해야 한다.
- 사망 후 14일 이내에 사망자의 연고를 찾아내야 한다. 지인이나 동료들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서 사망자의 연고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국가별 상황에 따라 무연고 장례를 치른 이후 유족과 연락이 되기도 한다.

| 사망자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119에 먼저 신고를 했다면, 구급차로 시신을 근처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간혹 회사 관리자나 대표 등이 사고현장을 정리한다며 시신수습을 동료 직원들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수습은 업무상 사고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119대원들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정도임을 고려하면, 평상시 아는 관계이거나 친한 동료들이라면 더욱 정신적 충격은 크고 오랫동안 남게 되는 일입니다. 이후 비슷한 상황

| Recovery of Remains and Funeral Process Depending on Connection with the Bereaved Family |

- In 2021, the Embassy of Thailand in South Korea notified the family in Thailand of the death of a migrant worker ○○○. However, because the family was unable to afford funeral expenses, the local government was asked to conduct the funeral as if that of a deceased person without known relatives. Even if the family is notified, if they are unable to hold the funeral due to financial or other difficulties, the funeral is handled in the same manner as when there are no identifiable family members.
- Once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deceased is confirmed, the embassy or the community of that nationality in South Korea will usually assist in identifying and locating the family. After confirming the family's wishes in the home country, the family's authority can be delegated to someone of the same nationality. When this authorization is granted, the representative must confirm the family's decision regarding cremation or repatriation of the body and proceed with recovering and managing the remains accordingly.
- The deceased person's next of kin must be identified within 14 days of death. If relatives cannot be confirmed through acquaintances or coworkers, the embassy of the deceased's country must be contacted to locate the family. Depending on each country's situation, there are cases where contact with the family is established only after a funeral for an unclaimed body has already been conducted.

| The body of the deceased is transported to a hospital

If first reported to 119, emergency responders will come to the workplace and transport the body by ambulance to a nearby hospital. Occasionally, there are cases where company managers or representatives, claiming they are clearing the accident site, instruct coworkers to handle the body themselves. Keep in mind that even 119 emergency responders, who regularly deal with accident scenes, may suffer psychological trauma from recovery work. Therefore, when those asked to handle the body are coworkers who knew the deceased personally or were close, the emotional shock can be far greater and enduring. Recalling similar scenes later can make everyday life extremely

을 연상하게 되거나 떠올리게 되는 경우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게 되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대가 ‘시신 부검’을 하기도 합니다

부검은 필요에 의해 하게 되며 그 필요성은 경찰과 검찰이 판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측에서 부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부검 요구에 대해 유족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간적 도의적 측면에서 유족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강제로 부검을 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부검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무연고로 확인되는 경우도 필요하다 판단하면 검찰 지시에 의해 부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신분확인이 안돼서 유족 연락이 어려운 경우,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족이나 유족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 지휘로 사망경위 확인을 위한 부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연고 상태이기 때문에 타살의 흔적이 없다면 부검 필요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종교나 가족의 종교 등에 따라 부검이라는 절차가 불편한 면도 있지만, 과로사 등 죽음을 가져온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 때는 부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한지, 부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검 여부는 유족과 동료, 지인, 연대자들이 같이 논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difficult and cause severe trauma, so coworkers should not perform such tasks.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may conduct an autopsy

An autopsy is performed when deemed necessary, and that necessity is determined b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 In some cases, the victim's side may request an autopsy, while in others, the bereaved family may refuse the police or prosecutor's request for one. Legally, the family's consent is not strictly required, but in practice, authorities usually avoid forcing an autopsy when they know the family objects, out of ethical consideration. In such cases, families should receive a full explanation of why the autopsy is considered necessary and make their decision afterwards.

If the bereaved family cannot be identified, or if the deceased is confirmed to have no known relatives, the prosecutor may order an autopsy if it is deemed necessary. This may occur when the victim's identity cannot be confirmed or when contacting the family in the home country is not possible. Because obtaining consent from the family or their authorized representative is impossible in such cases, the prosecutor may order an autopsy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Conversely, if the deceased is considered to have no relatives and there are no signs of foul play, authorities may decide not to perform an autopsy.

While autopsies may be uncomfortable due to the religious beliefs of the deceased or their fami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when the cause of death is unclear, such as in cases of death from overwork or suspected occupational disease, an autopsy can b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identifying the true cause. Therefore, whether an autopsy is necessary or whether there are issues in the procedure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It is best that the bereaved family, coworkers, acquaintances, and solidarity groups discuss and decide together about proceeding with an autopsy.

An accident investigation is conducted for fatal industrial accident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고조사'가 진행됩니다

노동부, 경찰, 관련 기관들의 사고조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을 방문하여 관리자나 직원, 목격자를 만나서 사고 경위와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질문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찾는 과정입니다.

사고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밝히는 게 아니라, 평상시 어떤 조건에서 작업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사고조사 시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회사도 있어서 정확한 현장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동료들의 증언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 피해자의 편에서 산재 사망자의 시선으로 사고를 보고 말하고 제기할 수 있는 유족과 동료·연대자(조력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 관계기관들의 사고조사에 참여를 요청하고 안된다면 의견이라도 개진해야 합니다.

유족들의 사고 현장방문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럴 때도 연대자(조력자)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장 훼손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관계기관에 요구해야 합니다.

관계기관들의 사고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별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서자료 등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에 별도 조사단이 회사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으면 사고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사고조사 사례 |

분쇄기에 이물질이 걸렸는데 기계를 끄지 않고 그냥 분쇄기 위에 올라가서 긴 작대기

Investigations by the Ministry of Labor, police,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involve visiting the worksite where the fatal accident occurred, interviewing managers, employees, and witnesses, and inspecting the site directly to identify the sequence of events and underlying causes of the accident.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is not only to determine the immediate cause of the accident, but also to uncover the usual working conditions that preceded it. Because some companies attempt to shift blame onto the victim, it is crucial for coworkers who can accurately describe the site conditions to testify and participate. The participation of bereaved families, coworkers, and solidarity members (supporters) is also essential, so that the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ceased worker and reflect their circumstances and voice. They should formally request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s accident investigation, and if that is denied, they should at least submit their opinions in writing or orally.

In most cases, the bereaved family can visit the accident site. When doing so, it is best to go together with solidarity groups and coworkers. To make this possible, it is important to demand that the site be preserved and not disturbed, and to continue pressing the authorities to ensure it.

If direct participation in the official investigation by government agencies is not possible, a separate independent investigation team may be formed to conduct its own inquiry and publish its findings. However, because most of the documentation and materials are held by the company, an independent team may face limitations unless it gains formal access to the company's records.

Example of an Accident Investigation

If a worker noticed that foreign material was caught in a crusher and, without turning off the machine, climbed onto it and tried to push the material down with a long stick, only to slip and fall in, it might at first seem that the worker failed to follow basic safety rules. However, if in reality the machine was never stopped, or no one at the site ever turned it off to remove obstructions, if the pressure to meet production quotas made such behavior routine, if there were no clear safety protocols or no training provided,

1 일반적 진행과정

로 이물질을 밀어내려다가 미끄러져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기계를 세우는 적이 없다가거나, 어느 누구도 기계를 끄고 이물질을 걸러내지 않는다가거나, 작업 물량이 많을 때는 더 독촉하는 상황이라거나,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없었거나,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등의 조건이었다면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의 잘못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사고조사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회사가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사합니다. 회사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안 지켰는지, 지키기 어려웠는지, 지켰으나 사고가 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판단을 위해 '사고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경위도 배경도 확인하고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도 살펴보는 '사고조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각각 회사 측의 잘못과 실수 등을 정리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관의 결정을 검찰로 보냅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수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족·동료·연대자(조력자)들이 고용노동부와 경찰 면담 등을 통해 수사 진척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 더 필요한지, 수사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챙겨야 합니다. 수사가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보완하고 독촉도 해야 합니다.

then the accident cannot simply be blamed on the worker's negligence for not following general safety rules. The process of uncovering these underlying conditions, identifying what the real work environment was like, and how the system itself created the risk, is what accident investigation is meant to d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police determine the cause of the accident through investigation

They investigate whether the company violated its legal obligations to protect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what duties the company failed to fulfill, why it failed to do so, or whether the accident occurred despite compliance. To make these determinations, they carry out an accident investigation.

This process is important because it examines not only the immediat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but also its background causes and the direct reason for the death. Afterwar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police each summarize the company's negligence and errors and decide whether prosecution is necessary. Their findings, with their decisions, are then submitted to the prosecutor's office for a decision on whether charges should be filed.

There is no fixed period for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r the police. Some cases are concluded within a month, while others may take six months or longer. In such cases, the bereaved family, coworkers, and solidarity groups must request meetings with the Ministry and police to check on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They should verify what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how much more time may be needed, and whether any aspects of the investigation have been overlooked. It is also important to press for a thorough and careful investigation and to follow up persistently to ensure accountability.

If it is confirmed that the company has violated the law, a criminal trial begins

회사가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이 회사, 사업주의 잘못을 판단하는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유족과 연대자는 재판을 방청하고 검찰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여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형사재판이 열릴 때는 참가하여 재판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는 않는지, 회사측은 어떤 변명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있어도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그런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사실이 얘기되고 있다면 유족과 연대자(조력자)들이 언론을 통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보내는 탄원서 등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유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이 과정은 연대자(조력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족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국에서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나 영상을 재판부에 보낼 수도 있고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재판은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재판 |

2016년 캄보디아 프놈펜 근처 마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속행'씨는 2018년부터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다, 2020년 12월 전기 공급이 끊어져 난방이 안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했다.

본국에 있는 유족들에게 연락하고 위임을 받고 산재보험을 신청하기까지 오랜 시간

If the company's illegal conduct is verified, the prosecution initiates a criminal case to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and the employer. During this process, the bereaved family and support groups may attend the trial and submit statements or opinions through the prosecution. They can also take part in various activities to ensure that the court reaches a fair and accurate decision. Whenever possible, it is recommended to attend the criminal hearings to observe whether the facts are being distorted or what kinds of excuses or defenses the company presents.

Even if certain facts were established during the accident investigation, the court may not be aware of them unless someone speaks up. If false or misleading claims are made during the trial, the bereaved family and support groups should make efforts to correct the record through the media, by submitting petitions to the prosecution or the court.

If the bereaved family does not reside in South Korea, this process can proceed only with greater effort and involvement from support groups. Even if the family remains abroad, they can send letters or video messages expressing their thoughts and grief to the court or share their perspective through media interviews or written statements.

A trial concerning a worker's death can serve as a turning point, a moment when one person's death helps prevent the deaths of other workers.

Sokheng's death became a catalyst for raising public awareness about the living conditions, rights, and systemic problems faced by migrant workers under South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 A Trial Hol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ountable for the Death of a Migrant Worker |

Sokheng, who came to South Korea in 2016 from a village near Phnom Penh, Cambodia, began working at a farm in Pocheon, Gyeonggi Province, in 2018. In December 2020, she died inside a plastic greenhouse where the heating system had failed after the electricity supply was cut off.

It took a long time to contact her family in Cambodia, delegate authority, and file for a claim under the IAC Insurance. Her case was finally approved as an industrial accident one year and five months after her death. The bereaved family in Cambodia and support groups in South Korea then began what they called a "meaningful lawsuit,"

1 일반적 진행과정

이 걸렸다. 사망 후 1년 5개월 만에 산재승인이 되었고 본국의 유족과 한국의 연대자(조력자)들은 ‘의미있는 소송’으로 속행 씨의 사망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을 시작했다.

속행씨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거주환경과 권리,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25년 9월 19일, 속행 씨의 죽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으니 유가족에게 배상을 하라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침해됐고, 제대로 관리감독했다면 건강검진이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I 사업주는 노동부에 사고발생을 보고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명이라도 생기거나, 사망은 아니지만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산재 발생 상황과 시기, 사고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담아야 하고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상치료 등의 경우는 ‘공상’이라는 편법으로 사고 발생을 감추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감추기가 어려워 재해조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노동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조건의 이주노동자인 경우는 죽음조차 가려지고 재해조사표가 제출되지 않기도 합니다.

한겨레신문 2024.12.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160.html

타이 사람 분추 프라바세농(당시 67살)이 지난해(2023년) 3월4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야

seeking to hol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egally responsible for her death.

On September 19, 2025, the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ore responsibility for Sokheng's death and ordered compensation to his family. The court stated that the worker's "right to live in a safe and adequate environment" had been violated, and that the authorities failed in their duty of supervision and inspection, noting that at least the victim would have been able to receive health checkup.

The employer must report the accident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f even one worker dies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or if a worker suffers an injury or illness requiring more than three days of leave (even if it is not fatal), the employer must complete an "Industrial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and submit it to the Ministry of Labor.

This document must include details such as the circumstances and timing of the accident, the cause, and plans for preventing recurrence, and it must be submitted within one month of the accident. In some cases of non-fatal injury, companies attempt to conceal the incident by classifying it as a "non-industrial accident" to avoid accountability. However, because cases involving death are difficult to conceal, the Industrial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is generally submitted.

Still, if the deceased worker was a migrant laborer living under conditions where no one around them would notice their absence, even their death can go unrecognized, and the report may never be filed.

Hankyoreh December 2, 20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160.html

Until March 4, 2023, when the body of Mr. Bunchoo Prabasenueng, a 67-year-old Thai national, was discovered in a gully on a hillside in Yamiri, Yeongbuk-myeon, Pocheon City, Gyeonggi Province, no one in the world knew that he had lived and died there, abandoned and forgotten. A secret burial. A life hidden, a death unnoticed.

It was only through a police investigation into an unattended death that the truth

미리 야산 고랑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그가 이곳에 '살다 죽어', '버려졌다'는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암장. 남몰래 묻힌 삶이었다. 죽음이었다.

고랑에 놓인 주검이 분추라는 것, 10년 동안 미등록 노동자로 돼지 농장에서 일했다는 것, 지난해(2023년) 3월1일 오전 대동맥 파열로 돌연사했다는 것, 3월2일 농장주와 아들이 모는 트랙터에 실려 300여m 떨어진 야산으로 옮겨졌다는 것, 산 중간 아래 파인 고랑에 버려지게 됐다는 사실은 경찰의 변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유족은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에 의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보상제도를 신청한다는 말입니다. 사고로 인한 산재사망의 경우는 산재보험 신청절차가 질병 사망에 비해 쉬운 편이니 주변의 도움을 받아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국내에 있지 않다면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 진행하기도 합니다.

간혹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고가 발생한 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라도 산재피해자(유족, 부상자, 치료자 등)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면 됩니다. 밀린 보험금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사업주)와 알아서 처리 해결하니 노동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산재보험 의무가입과 임의가입 |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되나 예외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농업·어업에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emerged: that the body found in the gully was Mr. Bunchoo; that he had worked for ten years as an undocumented laborer at a pig farm; that on the morning of March 1, 2023, he died suddenly of an aortic rupture; and that on March 2, the farm owner and his son carried his body on a tractor, moved it about 300 meters to a nearby hillside, and abandoned it in a shallow trench halfway up the mountain.

The bereaved family files for a claim under the IAC Insurance

It is commonly said that one “applies for the IAC Insurance.” To be precise, this means filing for the IAC Insurance compensation benefits. In cases of death caused by an accident, the procedure for filing for a claim is generally simpler than in cases of death due to occupational disease, so the bereaved family can usually file directly, with assistance from others if needed. If the family is not residing in South Korea,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may carry out the process on their behalf.

Sometimes, after an accident occurs, it is discovered that the employer never enrolled in IAC Insurance.

Even in such cases, the victim’s family, the injured worker, or those receiving treatment can still file for a claim with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ny unpaid or overdue insurance premiums will be handled directly between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nd the employer, so workers and their families do not need to worry about it.

Mandatory and Voluntary Enrollment in the IAC Insurance

The IAC Insurance applies to all workplaces with at least one employee, but there are exceptions.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sectors, where many migrant workers are employed, individually operated (non-corporate sole proprietor) farms or fisherie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are exempted from the IAC Insurance.

Let’s look at an example of a migrant worker managing or harvesting crops inside a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관리·수확 작업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를 보자.

- 그에게 일을 시키는 회사가 법인이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다.
- 김○○ 사장 개인회사고 작업자가 3명인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 김○○ 사장 개인회사고 작업자가 6명이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E8·E9비자 노동자는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고를 대비하여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도적 한계는 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이주노동자 고용허가가 나오지만, 만약 회사가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 사업주는 일정기간 이주노동자 고용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고용된 이주노동자도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산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이다.

산재보험신청과 별개로

유족이 회사와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산재보험신청과 별도로 산재사망사고를 만든 회사의 책임을 묻고 진심어린 사과, 금전적(민사)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사회제도적 차원이라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만, 산재사망사고를 만든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회사의 법적 책임, 도의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며 회사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회사측의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plastic greenhouse:

- Corporations are mandatorily enrolled in the IAC Insurance.
- If Mr. Kim's business is a privately owned farm with three workers, it is not required to enroll.
- If Mr. Kim's private business employs six workers, it must enroll in the IAC Insurance.

However, employers who wish to hire E-8 (Seasonal Worker) or E-9 (Employment Permit) visa holders in non-corporate agricultural or fishery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are required to enroll in the Farm and Fishery Workers' Safety Insurance to be eligible to hire migrant workers. Of course, the employer may also voluntarily enroll in the IAC Insurance instead.

There are systemic limitations, however. While employers are granted employment approval for migrant workers only after enrolling in the Farm and Fishery Workers' Safety Insurance, if a company hires migrant workers without enrolling and an accident occurs, the employer will be prohibited from hiring migrant workers for a certain period. At the same time, the migrant worker involved in the accident cannot receive any benefits from the Farm and Fishery Workers' Safety Insurance. This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at system and the IAC Insurance.

Negotiations Between the Bereaved Family and the Company, Separate from the IAC Insurance Claim

In addition to filing for a claim under the IAC Insurance, the bereaved family may also negotiate directly with the company responsible for the fatal accident, demanding a sincere apology, monetary (civil) compensation,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While the IAC Insurance process is carried out according to established institutional procedures, holding the company accountable for the industrial accident resulting in death is a separate process. This involves negotiating with the company by raising questions of legal responsibility, ethical responsi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Through such negotiations, the family may obtain an apology from the company whose actions or negligence led to the worker's death.

To date, no company has ever voluntarily acknowledged its mistakes or responsibility

① 일반적 진행과정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회사측이 잘못과 실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부분 책임회피 발언만 하며 노동자의 잘못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회사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회사의 사과로 고인이 살아오지는 못하지만,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며 유족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유족과 회사의 협상에서는 금전적인 책임(배·보상),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게 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법적으로 형사재판을 하게 됩니다.

*** 배·보상 :** 배상과 보상을 말한다. 배상은 회사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보상은 회사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법에 규정된 회사의 의무사항을 직접 어긴 것은 아니나, 노동자에 대한 건강·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책임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법에 규정된 것만을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측면이다.

*** 민사, 형사 :** 민사는 금전적 문제를 다루고, 형사는 어느 정도로 처벌할 것인지를 다룬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재판도 민사재판, 형사재판으로 나뉜다.

유족과 회사와의 협상은 법적으로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 과정으로 가기 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남은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유족과 회사의 협상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수사와 연계하여 결정되기 때 문입니다. 산재사망사고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을 빼고 유족과 회사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가족들은 민사재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상에 나서는 경우는 고인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유족들이, 연대자(조력자)들이 문제제기 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만 회사는 부담을 느끼고

immediately after a fatal accident. Companies have tried to avoid responsibility by blaming the worker instead. Therefore, it is through the process of negotiation that companies are compelled to publicly recognize their role and responsibility.

Although an apology cannot bring the deceased back to life, it serves to restore the dignity of the deceased and provides some comfort to the bereaved family.

During these negotiations, the family and the company discuss monetary compensation (reparation and compens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to avoid similar accidents in the future, eventually reaching a settlement. Afterward, the case proceeds to the criminal trial phase.

- * **Reparation and Compensation:** Reparation refers to holding the company accountable for acts that violate the law, whereas compensation means taking responsibility for harm that occurred even when no law was technically broken. In other words, while the company may not have directly violated a legal obligation, it still bears a fundament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and life of its workers. This understanding helps address the limitations of relying solely on legal obligations by emphasizing the company's broader social responsibility.
- * **Civil and Criminal Cases:** Civil cases deal primarily with financial matters, while criminal cases determine the extent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Accordingly, court proceedings are divided into civil trials and criminal trials.

Negotiations between the bereaved family and the company can begin before any formal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take place. The family should first demand that the company acknowledge responsibility for the industrial accident-related death and apologize to the surviving family members and coworkers. Matters related to criminal punishment are not discussed in these negotiations, as such issues are determined through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cases of industrial accident fatalities, whether or not the victims' families desire punishment does not determine whether an investigation or indictment will proceed. Therefore, the family and the company may negotiate only the issues not covered in the criminal trial.

If the two sid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the bereaved family may file a civil lawsuit.

Usually, a company only agrees to negotiate when the family and support groups raise the issue publicly,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company to quietly conceal the worker's

① 일반적 진행과정

협상 자리를 통해 유족의 요구를 듣고 사과와 산재보험과는 별도의 배보상 합의를 합니다. 이때 회사측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합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 유족의 합의가 있다 해도 형사처벌은 별도의 절차이기에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측에서 민사적 배보상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사장에 대한, 또는 회사측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합의서가 형사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낮춰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 유가족이 배보상합의를 했다고 사업주의 형량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는 판결 |

2024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공장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원회는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고, 민사상 배보상 합의를 위한 교섭을 시도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책임자들은 형사재판을 받았다. 일부 유가족이 회사와 민사상 배보상에 대해 합의했다. 회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었고 일부 유가족들은 회사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합의를 했고 또 다른 유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2025년 9월 23일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들의 조건을 악용하여 회사가 금전적 배보상을 무기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게 하고, 재판에서는 형량이 낮춰지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었다. 유가족들의 어쩔 수 없는 합의이기도 하고, 민사상 배보상은 유가족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민사상 배보상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자연스럽게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날 아리셀 대표이사는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death. In such cases, the company may agree to a meeting to hear the family's demands, offer an apology, and reach a separate agreement for financial compensation beyond the IAC Insurance. Sometimes, the company demands that the bereaved family sign an agreement stating that they do not wish for criminal punishment of the company or its managers. However, even if the family agrees, such an agreement has no legal effect on criminal liability, since criminal prosecution follows a separate legal process.

Nevertheless, companies sometimes request such an agreement as a condition for reaching a civil compensation settlement, because even though it cannot prevent criminal punishment, it may influence the court to impose a lighter sentence during the criminal trial.

I Court Ruling

: A Civil Compensation Agreement Does Not Justify a Lighter Criminal Sentence for the Employer I

On June 24th, 2024, a lithium battery explosion and fire at the Aricell factory in Hwaseong killed 23 workers and injured 9 others. Among the 23 victims, 18 were migrant workers. The Countermeasure Committee, formed by the bereaved famil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gan a campaign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 deaths and attempted to negotiate civil compensation settlements with the company. The CEO and other company officials faced criminal prosecution. Some of the bereaved families reached civil compensation agreements with the company. The company included in these agreements a clause stating that the families did not wish for punishment. Although some families agreed, despite being unable to forgive the company, others refused to settle and filed civil lawsuits instead.

On September 23rd, 2025, the first-trial criminal verdict was announced. The court ruled that it was improper for the company to exploit the families' difficult circumstances, forcing them to sign agreements stating they did not want punishment in exchange for money, and then using those agreements to seek reduced sentences. The court emphasized that such settlements are sometimes made out of necessity, and civil compensation is the family's right. Agreeing to civil compensation does not mean the company can avoid or lessen criminal punishment. On that day, the Aricell CEO was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2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내 가족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회사의 말도 무조건 믿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하시고 천천히 요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특히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연대자(조력자)들과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유족의 역할이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찾고자 하면 유족과 같이 행동하겠다는 연대자(조력자)들은 있습니다.

2

2 Response from the Bereaved Family's Perspective

Response from the Bereaved Family's Perspective



Do not think that the accident is due to your family member's mistake, and do not believe everything the company says. First, take time to think about what you truly want, and then decide what to ask for and how to proceed. If there is something you wish to pursue, especially if you want to uncover the true cause of death, you must work together with trustworthy support groups.

Even if you are unable to come to South Korea, there are still important roles you can play. While difficult, if you refuse to give up and seek to claim your rights, there will always be support groups willing to stand and act alongside you.

내 가족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일을 하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슬프고 정신없지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밝히는 것이 '사고조사', '진상조사'입니다.

그런데 사고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유가족들이 회사로부터 듣게 되는 말은 대부분 '작업자의 실수'이거나 '작업자의 잘못'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수와 잘못의 내용은 작업장마다 사망사고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줄다가 그랬다, 행동이 느려서 그랬다, 말이 안통해서 저런 일이 생겼다, 다른 작업자들은 저런 일 없다, 일을 원래 못한다, 조심성이 없다,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저럴 줄 알았다,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괜히 일 시켜 가지고 회사가 피해만 입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회사 관계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노동자가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거나 작업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회사의 설명은 웬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익숙하면 방심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낯설면 잘 몰라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업자의 실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수해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작업 장비와 설비에 작업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작업 방법, 작업 시간이나 강도, 같이 일하는 사람의 수, 일하는 환경도 안전하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I Do Not Blame Your Family Member

When you receive the news that a family member has died while working, you may feel overwhelmed with grief and confusion, yet also have a deep desire to know why and how they died. The death of a loved one is a profound shock, but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ir death is equally important. Revealing the cause and sequence of events that resulted in a workplace death is the purpose of accident investigations and fact-finding inquiries.

However, before any investigation into the accident takes place, the bereaved family will often hear from the company that the cause was either a “worker’s mistake” or “the worker’s fault.”

The specific content of such claims naturally varies depending on the workplace and the circumstances of each death.

Company representatives may say things such as, “the worker must have dozed off,” “the worker was too slow,” “That happened because of a language barrier,” “Other workers never make that kind of mistake,” “He was bad at his job,” “She wasn’t careful enough,” “We told him not to do it that way, but he did,” “I knew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We can’t understand why he did that,” “We only got into trouble because we hired him.”

If the deceased worker was not fluent in Korean, the company’s explanation, that the accident occurred because the worker misunderstood instructions or did not know the proper work method, may sound plausible at first.

However, humans are bound to make mistakes. When one is familiar with a task, carelessness can lead to mistakes. When something is unfamiliar, a lack of knowledge can do the same. And sometimes what appears to be a mistake is not truly the worker’s fault. For this reason, work equipment and facilities must include protective measures that prevent workers from being injured or killed even if a mistake occurs. In addition, factors such as work methods, hours and intensity, number of coworker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must all be arranged so that labor can be performed safely.

Under South Korean labor law, it is the legal duty of employers, companies, and business owners to protect and promote the lif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he company’s

한국 노동법에는 사업주·회사·사장은 ‘노동자 생명, 안전, 건강 유지·보장 노력’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의무가 먼저입니다. 작업자가 의도적으로 다치거나 죽으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면 작업자에게 책임을 씌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처음 일을 가르칠 때는 원칙대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기계에 뭔가가 걸려서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면, 꼭 기계를 세우고 전원을 다 내리고 기계를 세웠다는 안내문도 붙이고 주변 작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기계라서 불순물이 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기계를 교체해 주지는 않으면서, 작업속도가 느리다고 작업자를 야단치기만 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작업자가 기계를 세우고, 전원을 내리고, 주변에 알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기계를 다루는 한국 국적 노동자들도 기계를 세우지 않고 정비작업을 하는 분위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조건의 사업장에서 기계 끼임 사망사고가 나면 그 노동자의 잘못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회사는 원칙대로 일하라고 지시했었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말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고 있으니 사고의 원인을 찾아보기도 전에 ‘불법체류를 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노동자는 행정적 틀을 벗어나 있을 뿐 불법인 존재는 아닙니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것만으로(그 법의 테두리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것이 당사자의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사망사고 이후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그 죽음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responsibility comes first. Unless the worker intentionally tried to cause injury or death, the blame must not be placed on the worker.

At first, a worker may be taught the correct procedures when learning the job. For example, if something gets stuck in a machine, they may be told to stop the machine, shut off all power, post a notice that the machine is out of operation, and make sure nearby workers are informed before checking the problem. But imagine a situation where the machine is old and malfunctions frequently, yet the company never replaces the equipment, and instead scolds workers for being too slow. In such an environment, can a worker realistically be expected to stop the machine, turn off the power, and notify everyone every single time a blockage occurs?

And what if South Korean workers operating other machines also perform maintenance without stopping their machines, because that has become the workplace norm?

In these conditions, when a worker dies after being caught in a machine, can we really say it was the worker's fault? Even if the company claims that it instructed workers to follow proper safety procedures, it cannot avoid responsibility simply on that basis. Such statements are merely formalities, not genuine efforts to ensure safety.

In the ca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people may focus more on the fact that they were staying in the country without legal status than on investigating the real cause of the accident. However, undocumented workers are not illegal beings. They exist outside the administrative framework, but that does not make their existence itself unlawful. Merely being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law, which itself may be questionable in its fairness or validity, cannot mean that everything that happens afterward is the individual's fault.

While the procedures following a fatal accident may differ somewhat, it is wrong to define such a death as the worker's responsibility simply because they were undocumented.

Seeking the truth and demanding justice from the company or society is only possible when we have the confidence that our actions are legitimate and justified. Doing so is also a way to protect the dignity of the worker who died in the industrial accident. If the bereaved family comes to believe that the worker was responsible for their own death, they will be unable to uncover the truth, receive compensation, or obtain a genuine

회사나 사회를 향해 진실을 찾고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는 나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산재사망 노동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유족이 회사 말을 믿고 사고당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제대로 밝히지도, 보상받지도, 사과 받지도 못합니다. 타국에서 일하다 자기 잘못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었다 로 남기지 않도록 유가족들 스스로 산재사망 사고 발생 이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요구할지 생각해보시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면 아득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울음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 그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야 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밀려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인데다 낯선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어찌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유족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으나 결정은 유가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죽음을 안 순간, 당일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 하라고 독촉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해보십시오.

사망한 가족은 왜 사고를 당했는지, 남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명예롭게 잘 떠나보낼 수 있을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책임지라고 할지 등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떠올릴 때 사망한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apology. To ensure that the deceased is not remembered merely as an unfortunate person who died abroad because of their own mistake, the family must develop their own understanding of why the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and recognize that the responsibility lies beyond the individual.

Think About What You Want and What You Will Ask For

Losing a loved one leaves you feeling overwhelmed and lost. It can be hard to imagine how to go on living, and sometimes there is nothing but tears. But crying alone cannot change reality. Soon, you will need to resolve and handle multiple things, and because this is something you are experiencing for the first time, often in a foreign country, it can feel even more confusing and difficult.

At such a tim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bereaved family is to think about and decide “what I want to do, and how I want to do it.” You may listen to the advice of others, but the decisions belong to you, the family.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make those decisions immediately on the day you learn of the death. If anyone tries to pressure you to decide quickly, you can tell them that you need time to think. Take a day or two to collect your thoughts calmly.

You might reflect on why your family member died, how to ensure that their death is not in vain, how to let them go with dignity, how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will live, who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death, and what kind of responsibility should be demanded. When considering what you want, it can also help to imagin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ceased. Think about whether your loved one would have wanted their death to be quietly forgotten.

If You Want to Know the Cause of Death and Hold Someone Accountable, You Must Step Forward

좋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조용히 덮이기를 원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원인을 알고 책임을 묻고 싶다면 나서야 합니다

죽음 후에 남은 책임묻기,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왜 죽었을까” “피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물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일터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한 현장을 찾아간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요 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할 말이 있다고 해도 언어가 다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보자고 제안하는 연대자(조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브로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법적으로 잘 정리해주겠다고 하는 공무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단위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가족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여러 곳을 만나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같은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연대자(조력자)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 등을 충분히 물어보십시오.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통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유족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대사관에 연락하면 가족의 위임을 받아 대리

You may appoint a legal representative to handle matters of accountability and compensation after your loved one's death, but they will not be able to resolve everything on their own.

Especially if you continue to ask yourself, "Why did they die?" or "Could this have been prevented?", it is necessary to visit the workplac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When deciding to visit the site, you may not know who to meet, how to meet them, or what to say. Even if you have things you wish to say, language barriers can make it feel impossible to express them.

There will be support groups who suggest making sure this death is not in vain. At the same time, there may also be brokers who promise to get you a large settlement, or officials who tell you not to make trouble and that they will handle things legally. In some cases, there may be no one at all offering any suggestions or assistance. In such situations, the bereaved family must make their own intentions clear, meet with different people and organizations, and make decisions carefully.

Ask support groups, who want to reveal the cause of death and prevent future tragedies, any questions or concerns you may have. If you do not share the same language, these difficulties can be resolved through an interpreter.

1 If the Bereaved Family Lives in South Korea

If, for various reasons, you wish to conclude the matter simply by filing for a claim under the IAC Insurance, you can submit the claim directly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f even that feels difficult, you may contact your embassy, which can file the IAC Insurance claim on your behalf after receiving power of attorney from the family.

Filing for IAC Insurance is the first step.

If you also wish to negotiate with the company, start by meeting with people or organizations, through coworkers or acquaintances, who may be able to offer guidance and support. It is fine to visit two or three different organizations or even seek consultation by phone.

인의 자격으로 산재신청을 해줍니다.

산재보험신청은 기본이고 회사와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주변 동료나 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한 곳이 아니라 두 세 곳을 찾아가도 좋고 전화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유족급여신청서 작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적으로 회사가 냄)

유족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언해주는 연대자(조력자)에게 사업주를 만나고 사고현장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살고 있는 거주지와 사고가 난 곳의 거리가 멀다면 사고대응을 위해 임시거주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발생한 죽음이지만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인 이주민이 내야 하는 서류는 본국에서 발급하거나 승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② 유족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 지인이 있는 경우와 지인이 없는 경우에 따라 연락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또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 연락하느냐에 따라서도 유족들

Documents Required for Filing an IAC Insurance Claim

- Completed Application for Survivor's Benefits Form
- Death Certificate or Postmortem Examination Report
- Autopsy Report (if the cause of death is unknown)
- Identification document verifying the claimant's identity
- Documents verifying wages (usually provided by the company)

You may ask support groups, those who understand the grief of the bereaved family yet also offer practical guidance, for help if you wish to meet the employer or visit the accident site, and inquire about how to proceed.

If the distance between your residence and the accident site is far, it may be possible to arrange temporary accommodation to assist with the response process. Although the death occurred within South Korea, you should still contact your embassy and check what documents are required. For migrant workers of foreign nationality, many of the necessary documents must be issued or approved by authorities in their home country.

2 If the Bereaved Family Lives in Their Home Country

How quickly and accurately the family is informed depends on whether there are acquaintances in South Korea and on who reaches out to them. The person's stance and approach can also influence how the family decides what to do next.

Families residing abroad may come to South Korea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response process. However, there may be issues to resolve before traveling, such as the cost of airfare, and concerns about how the family members remaining in the home country will manage while others are away.

These and other practical matters can be discussed and resolved together with support group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Aricell industrial accident in Hwaseong in June 2024, where 18 migrant workers died, 17 of them were ethnic Koreans from China. At that time, when the families in China expressed their wish to come to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ranged for their prompt entry. Those who wished to come were provided with

이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유가족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비행기 예약에 필요한 비용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가족 외에 본국에 남는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등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상의하면서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산재사망사고에서는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17명이 중국동포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사망노동자들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했습니다. 입국하기를 희망하고 요구하는 가족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지원, 한국에서 머물 숙소와 식사도 지원되었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통역 지원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이 그냥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연대자들이 요구하면서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조건이라면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 있는 것처럼 남편의 갑작스런 산재사망사고를 당한 ‘레티화 씨’는 본국에 있으면서 친척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를 소개받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 사이 연대자들과 상의하고 준비하면서 입국준비를 했고, 한국에 들어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입국을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입국이 늦어져서 해결이 늦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빨리 마무리하는 것보다 후회하지 않을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round-trip airfare, accommodation and meals in South Korea, legal counseling, and interpretation services. Of course, such support was not automatically granted: it became possible because the bereaved families and support groups demanded it.

If it is difficult for the family to come to South Korea, they may grant power of attorney to someone else. For example, Ms. Le Thi Hoa, whose husband died suddenly in an industrial accident, was introduced to a labor union and civil organization through relatives while still in her home country and authorized them to act on her behalf. During that time, she consulted and prepared together with support groups. When she eventually arrived in South Korea, she was able to pursue accountability for her husband's death.

Depending on the situation, preparing to enter South Korea may take time, and the conditions differ by country. It may feel frustrating if the response is delayed due to entry procedures, but what matters more than resolving things quickly is ensuring that the process is completed in a way that leaves no regrets.

The Story of Ms. Le Thi Hoa,

Who Came to South Korea After Her Husband's Fatal Accident

SisaIN <https://v.daum.net/v/20240306074836035>

On the day of the accident (July 6th, 2023), Ms. Le Thi Hoa (33) received a call from her younger sister, who was studying in South Korea. Her husband, Mr. Khuan, had been in an accident at a construction site, and two workers had been taken to the hospital in critical condition. One of them, her sister said, might be Khuan. Hoa began to pray. Thirty minutes later, she received another call. Her husband had died.

The first thing Ms. Hoa faced as the bereaved wife of a migrant worker was persistent phone calls pressuring her to settle. She could not tell whether the callers were from the main contractor or a subcontractor, but their words were always similar: "If you agree to settle, we can help you receive your husband's body quickly." "The longer you delay, the less compensation you'll receive." "Come to South Korea, take the settlement money, and raise your children back home." No one explained the causes of the accident, and no one offered an apology. Even as she was trying to process her grief, she knew instinctively that something was not right. Even after her husband's body was sent back to Vietnam, the calls continued.

시사IN 2024.12.02.

<https://v.daum.net/v/20240306074836035>

남편의 사망사고 후 한국에 입국한 아내 레티화 씨 이야기

사고가 발생한 당일(2023년 7월 6일), 쿠안 씨의 아내 레티화 씨(33)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여동생에게 전화를 받았다. 쿠안 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두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 갔는데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이었다. 그중 한 명이 쿠안 씨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화 씨는 기도를 시작했다. 30분 후, 쿠안 씨가 사망했다는 전화가 왔다.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된 레티화 씨가 가장 먼저 겪은 일은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는 일이었다. 원청업체 사람인지 하청업체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이들이 하는 말은 매번 비슷했다. “남편의 시신을 빨리 받게 도와줄 테니 회사와 합의해라” “빨리 합의하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보상 금액이 낮아질 거다” “한국에 들어와서 보상금을 받고 그 돈으로 고향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왜 사고가 일어난 건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겨울이 없는 중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쿠안 씨의 시신이 베트남에 인도된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됐다.

쿠안 씨의 한국 장례식장에도 브로커들이 모여 들었다.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는 법무법인을 알려주겠다는 중개인들이었다. 경남 창원에서 미등록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화 씨의 친척이 장례식장을 방문하자 고인의 친족인 것을 알아챈 브로커들이 그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한국 사정에 밝은 주변인들은 화 씨에게 “돈 얘기부터 꺼내는 사람은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화 씨의 곤란한 사정을 알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친척이 그를 대신해 이주민지원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고, 센터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소개해주었다.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2023년 8월, 화 씨는 처음으로 민주노총 담당자와 연락을 나누고 사건 일체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쿠안 씨가 사망한 지 6개월이 흐른 2023년 연말(12월 8일), 화 씨는 회사측과 교섭을 하

At Mr. Khuan's funeral in South Korea, brokers gathered as well. Middlemen offering to introduce her to law firms that would supposedly help her get a better compensation settlement. When a relative of Ms. Hoa, who had been working as an undocumented laborer in Changwon, came to the funeral, brokers recognized him as a family member and immediately approached him. People familiar with how things work in South Korea warned Ms. Hoa to never trust anyone who starts by talking about money.

Aware of Ms. Hoa's difficult situation, a relative working in South Korea consulted a migrant support center on her behalf. The center then referred her to the Chungbuk branch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 month after the accident, in August 2023, Ms. Hoa spoke for the first time with a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and decided to entrust the entire case to them.

Six months after her husband's death, in December 2023, Ms. Hoa arrived in South Korea to negotiate with the company. She entered on a C-3-1 short-term visa (valid for three months), which was issued after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ubmitted an invitation letter and a letter of guarantee to the South Korean Embassy in Vietnam. This process clearly showed how difficult it is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migrant workers to seek the truth and pursue legal action without organizational support.

On March 14th, 2024, Ms. Hoa, together with support groups,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company that included an apology, respectful treatment for the deceased and his family,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n March 30th, she returned to Vietnam to reunite with her children.

The bereaved family has rights. However, nothing will be resolved unless the family takes action and speaks up for themselves. Even though the law guarantees these rights, they are not automatically enforced.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if there is something you want or believe is right, you must ask, demand, and act.

By speaking up, you can help ensure that others who suffer similar losses will not have to endure the same pain and struggle.

Those others may one day be your acquaintances, or even your own family members.

By taking action, you are not only protecting your own rights but also defending the rights of others. You are also honoring the rights and the memory of your loved one who passed away.

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그가 한국에 입국하며 발급받은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 C3-1 단기 방문 비자다. 민주노총에서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일련의 과정은 단체의 협력 없이 이주노동자 유족 혼자 산업재해의 피해를 규명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 2024년 3월 14일 레티화 씨는 연대자들과 함께 회사의 사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대해 합의하고 3월 30일 아이들이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유가족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스스로 원하고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적용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요구하고 나서야 합니다.

내가 나섬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똑같이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섬으로 나의 권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권리도 지켜주게 될 것이며, 사망한 내 가족의 권리도 명예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대사관에 확인하자 |

- 대사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자국민 노동자들의 산재대응매뉴얼이나 대응팀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담당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 유가족들은 민원인의 위치로 보일 수 있음도 전제해야 한다.
- 그럼에도 주한 대사관에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게 되면 요청하고 물어볼 수 있고, 대사관은 민원을 처리하거나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요구하고 요청한다고 다

| Check with Your Embassy |

- Although conditions differ across embassies, most do not have a separate manual or dedicated team for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related cases involving their citizens.
- The staff generally handle matters within their capacity, which means that bereaved families may be treated as ordinary civil petitioners.
- Nevertheless, when you contact or are contacted by your embassy, you may make requests and ask questions. The embassy has a duty to respond to inquiries and process requests, even if not every request can be fully met. Still, once an inquiry is mad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ignore it entirely.

Examples of requests you may make:

- I would like to receive a written report on the accident. I was in shock at the time and can't remember what I heard. I want to understand clearly what happened.
- Please provide translated versions of documents used for filing IAC Insurance claims, such as the survivor's benefits application and funeral expense forms.
- I would like to know what actions the company has taken and what it plans to do.
- I want to travel to South Korea. Please tell me the quickest way to make that possible.
- If the embassy can provide legal assistance, please inform me. Also, I request interpretation support.

| Staying in South Korea as a Bereaved Family Member |

Usually, bereaved family members enter South Korea on a short-term visit visa, and then begin the process of obtaining temporary residence status.

1. Bereaved families can generally stay in South Korea under a G-1 (Other) visa category.
 - This visa allows a maximum stay of one year, with the possibility of extension depending on circumstances.
2. To extend the stay, applicants must submit documents proving their status as bereaved family members of an industrial accident victim and explaining why an

이뤄지는 것은 아니나, 모른 채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요구를 해볼 수 있다.

- 사고 내용을 문서로 전달받고 싶다. 정신이 없어서 들어도 기억이 안난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고 싶다.
- 유족급여, 장의비 신청 등 산재신청에 쓰이는 자료를 본국어로 번역하여 받고 싶다.
- 회사는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 대사관에서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통역을 지원해달라.

| 유가족의 한국 체류 |

본국에서 주로 단기방문비자로 일단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1. 산재유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G-1(기타) 비자 자격으로 체류 가능하다.
 - 최대 1년 체류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 체류 연장을 하려면 신청자가 산재유가족이며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산재여부 확인: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 (산재승인결정서, 유족급여신청 접수증 등)
 - 가족관계 확인: 본국이나 대사관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공증이 꼭 있어야 함
 - 체류상태 확인: 머무는 곳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인서
 - 연장조건 확인: 기간 연장 필요성이나 그 기간동안 취업하지 않고 생계유지가 가능한 지 등을 설명하는 문서(체류 사유서, 생계유지 계획서 등)
 - 신청자 확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extension is necessary.

- Verif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status: Death certificate issued by the hospital, official documents from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uch as IAC approval notice, or survivor's benefits claim receipt).
- Proof of family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s (e.g., marriage or birth certificates) issued by the home country or embassy, with notarization required.
- Proof of residence in South Korea: Lease contract or written confirmation of current accommodation.
- Conditions of extension: Documents explaining why an extension is needed and how living expenses will be covered during the stay without employment (such as a statement of purpose for stay or a financial maintenance plan).
- Applicant identification: Passport, foreign registration card, or equivalent.

3

동료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가장 먼저 119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 시기 동안 사고 현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손대지 마십시오.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주고,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나 커뮤니티에도 사고 소식을 알려서 산재사망사고가 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평상시 아는 단체나 커뮤니티에 사고 이후 동료들의 어려움을 상의하고 지원을 요청해보세요. 특히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같은 직장의 동료는 경찰이나 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Response from the Coworkers' Perspective



When an accident occurs, the first step is to call 119. After reporting, all work must be stopped for a certain period, and the accident site must be preserved exactly as it is. Do not touch or alter anything. If you have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victim's family, inform them of the situation and explain the situation. You should also notify coworkers and your communities about the accident so that the death is not hidden and can be recognized as a workplace fatality. Discuss with trusted groups or community organizations about the difficulties faced by coworkers after the accident, and seek their support. Those who witnessed the accident or work in the same workplace may be required to attend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police 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사고 현장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기계나 설비가 돌아가고 있다면 전원을 차단하고 그 외의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신수습은 119나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억지로 사업주가 시킨다 해도 못한다고 해야 합니다. 트라우마로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수습·현장수습이라는 이유로 실시한 행위가 사고현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19에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합니다

회사가 피해자를 회사 차로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어렵다면 가능하면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음이든 녹화든 회사가 회사 차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정황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회사가 산재 사고가 아니라고 거짓말 못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족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릴 때는 가족의 충격을 고려하되 일을 하는 곳에서 몇 시쯤에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현재 피해자는 어떤 상태고 회사가 어떻게 했고, 어느 병원으로 갔다는 것을 아는 만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공유하여 산재 사고가 덮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평상시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서 상호 책임을 갖는 관계

Do Not Disturb the Accident Site

If machinery or equipment is still operating at the accident site, turn off the power, but do not touch or alter anything else. The collection of the body must be handled by 119 emergency responders or the police. Even if the employer orders you to do it, you must firmly refuse, as such work can cause serious psychological trauma.

Furthermore, actions taken under the pretext of “clearing the scene” or “recovering the body” can sometimes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crucial evidence at the accident site.

Always Call 119 First

If the company says it will take the victim to the hospital in a company vehicle, oppose that plan. If you cannot stop them and must go, try to ride together in the vehicle if possible. Also, make sure to leave a record, audio or video, of the company moving the victim in a company car to the hospital. That record can become important evidence later to prevent the company from falsely claiming the incident was not a industrial accident.

Contact the Victim's Family, Close Friends, and Community Members

You must inform the family about the accident. When doing so, be considerate of their emotional shock, but also clearly explain what you know: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accident occurred; the victim's current condition; how the company responded; and which hospital the victim was taken to.

You should also share this information with close friends or community members so that the industrial accident is not covered up. To ensure such communication is possibl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regular contact and mutual support among coworkers and acquaintances in everyday life.

들이 필요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에 연락합시다

사고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업장에 계속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 동료들의 상태나 상황도 알려주십시오. 지원과 연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동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수습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고 일하기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런 심리적 물리적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의논하면 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작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시신이 수습되고 정리되었다고 해서 일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지만, 위험작업현장이기도 하고 사고조사를 위해서도 작업이 중지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작업 중지는 이주노동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일을 안한다고 하면 사업주가 괴롭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연락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보십시오.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고 ‘작업중지 스티커’를 기계나 사업장 안에 붙이고 갈 겁니다. 작업중지 명령이 풀릴 때까지 그 기계를 사용하지 말라거나, 작업라인을 멈추라거나 등등을 알려줍니다. 혹시 스티커는 봤지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 스티커 아래 써진 전화번호(담당

Contac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Can Provide Support

You should inform relevant organizations or support groups about the accident and the victim's situation, and ask for their help. Also, make sure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migrant workers and coworkers who are still working at the same site. They, too, may need support and solidarity, even if they have not yet realized it themselves.

For example, if you do not know what to do after the initial response, you can seek advice on what steps to take next. If you feel unable or unwilling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place, you can also discuss your emotional and physical state and consult about possible alternatives.

Work Must Be Stopped at the Accident Site

Even after the body has been recovered and the scene cleared, work must not resume immediately at the site where a fatal accident occurred. Not only is the site psychologically distressing, but it is also a hazardous environment that must be preserved for accident investigation. The right to stop work is a basic right that migrant workers also have.

You may fear that your employer will retaliate or harass you if you refuse to continue working. In such cases, contact organizations or support groups that can help you exercise your right to stop work.

After a fatal accid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ll visit the site for an investigation. They will attach "Work Suspension" stickers on the machinery or within the worksite. These stickers indicate that you must not operate the machine or continue production until the suspension order is officially lifted. If you see such a sticker but do not understand what it means, you can call the phone number written below it (the contact for the responsible labor inspector) and ask for clarification. If it is difficult to call unfamiliar numbers or communicate in Korean, take a photo of the sticker and contact a community organization or support center that provides interpretation.

고용노동부 연락처)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낯선 곳에 전화하는 게 어렵고 한국어로 소통이 힘들다면 통역이 되는 사회단체나 지원센터에 '작업중지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경찰이나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연대자(조력자)와 함께 가세요

사고를 목격했거나 사망피해자를 발견했거나 신고했거나 같이 일하던 동료였다면 산재사망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나 고용노동부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망사고에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이나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가 필요해서 부르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고, 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고 회사에 유리한 대답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동료들의 대답 하나 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이전부터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경이나 기계 설비, 일터 분위기 등까지 말하면 좋습니다.

혼자 가기 어렵다면 연대자(조력자)와 함께 가도 됩니다.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조사를 가기 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요구하고 믿을 수 있는 통역인과 같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Go to Police or Labor Ministry Investigations with Support Groups

If you witnessed the accident, found the victim, reported the incident, or worked with the deceased, you may be called in by the police 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questioning as part of their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workplace fatality.

Usually, this does not mean you are under suspicion. The police 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eed to hear from those who best understand the workplace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accident in order to uncover the truth.

Over time, your memory may fade or become distorted, and the company might try to coach you on what to say or encourage answers that serve its interests.

Every statement given by coworkers during the investigation becomes important evidence. If possible, also mention unsafe conditions, malfunctioning equipment, or problems in the workplace that existed prior to the accident.

If it feels difficult to attend the investigation alone, you may bring members of support groups with you. If there is something specific you want to say, it's helpful to write down your thoughts beforehand. If you need interpretation, you have the right to request an interpreter, and it is best to go with an interpreter you trus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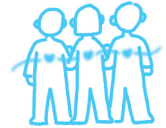
연대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연대자들끼리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 대해 간단히라도 기록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가족까지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문화도 확인하여 장례 등 수습과정을 함께 하는 역할에 신경써야 합니다. 법률대응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고, 사고 경위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을 나가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일터에 남아있는 동료들의 비자도 확인하고 사업장 변경이 필요한지, 가능한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4

Response Needed from Support Groups



Support groups should coordinate among themselves. Encourage migrant workers to record even brief notes about their workplaces and to share those records, and help them set up an emergency contact network that includes family members. After an accident, support groups must confirm the victim's identity and take into account the victim's cultural background, so they can accompany the family through the recovery and funeral process. Decisions about legal action require careful judgment, and to clarify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visit the accident site.

Support groups should also check the visa status of coworkers who remain at the workplac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and carefully assess whether a workplace transfer is necessary and feasible.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모두 진정한 연대자(조력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대자는 산재사망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노동이 나의 삶과 이어져있고, 그의 죽음에 우리가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인, 단체가 연대자(또는 조력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이거나 유족이거나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한 동료는 아니지만 연대자들의 활동은 산재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역, 영역별로 연계하도록 합시다

평상시에도 이주노동에 대해 연대자 단체로 역할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럽지만 누군가의 죽음의 연대자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자들이 모여서 같이 대응하기 위해 ‘지원모임’ ‘대책위원회’ 같은 연대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주로 해주는 연대자(단체, 조력단체)가 있다해도, 혼자서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대응해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연대자들도 산재사망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여러 연대 단위들의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연대자(조력단체)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대행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에도 연대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연대체를 만들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서로의 힘과 시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연대자들끼리도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Not everyone who claims they want to help can truly be called a support group. Support groups do not treat an industrial accident or workplace death as an individual problem, but rather as a social issue that concerns everyone. They ar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o believe that one person's labor is connected to our shared lives, and that their death is a problem that we must all confront together.

Even though they may not be migrant workers, family members, or coworkers of the deceased, the efforts of support groups are invaluable in uncovering the truth behind industrial fatalities.

Build Connections Across Regions and Fields

Some organizations already act as support groups for migrant workers, while others step forward as a response to a particular death or industrial accident. In such cases, support groups often come together to form coalitions or joint response committees.

Even if there are support groups or organizations that primarily focus on counseling and legal aid, it is difficult for a single group to uncover the full truth and respond effectively to the death of a worker. Those who already work to ad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faced by migrant workers must also unite their efforts to respond to workplace fatalities. While each organization may have its own independent role, there are also tasks that require the combined strength of multiple groups. Support groups are not substitute problem-solvers who can fix everything on behalf of others. Rather, it is best when different groups cooperate and coordinate, each contributing according to their unique strengths and areas of expertise.

Although a new coalition is not formed every time a worker dies, it is still essential that support groups remain connected, so they can share their resources and efforts whenever needed.

Create an Emergency Contact Network That Includes Family Members

가족까지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둡시다

평상시 이주노동자들의 연대자이자 조력자로 역할을 하는 곳이거나 그런 역할을 지향하고 있는 단위(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주민공동체, 노동조합, 상담센터, 종교단체 등)라면 이주노동자들과 연락망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연락망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바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평상시 소통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락망은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노동자의 가족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회사 입사할 때 ‘비상연락망’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을 확인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가족의 연락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도서관을 가면 내가 책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반납을 권하는 문자를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연락처를 적도록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하는 곳에 대해 기록, 이야기 할 기회를 가져봅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 생활 나눔을 통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것에도 필요하지만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모임할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대자 단체나 조력 단위에서 정리해놓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노동자들이 각자 핸드폰으로 메모하거나 일기로

Organizations that already act or aspire to act as support groups and allies of migrant workers (such as civil society groups, migrant communities, labor unions, counseling centers, or religious organizations) are likely to already have communication networks with migrant worker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regular communication through these networks so tha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formation can be shared immediately. Moreover, the emergency contact list should include not only the migrant workers currently in South Korea,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in their home countries.

Just as we list an emergency contact when we visit a hospital or start a new job, someone authorized to be informed or to give consent if something happens to us, migrant workers' family members should also be included in such networks. It is similar to how at libraries you can list an additional contact number so that reminders can be sent if a book is not returned on time.

Take Time to Share and Record Experiences About the Workplace

It is important for migrant workers to share and document their experiences regarding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s. Doing so not only helps in responding effectively after a fatal accident, but can also prevent such accidents from occurring in the first place.

Whether meetings are held regularly or occasionally, it is valuable for support groups or assisting organizations to gather and organize these shared stories. Workers themselves can also use their phones to take simple notes or write diary entries about what they find difficult or wish to change, as well as any harassment they experience or witness. Encouraging them to take photos or videos as records can also be an effective way to ensure that important details are not lost.

Identifying the Deceased Worker May Be Difficult

The first challenge after a fatal accident is often the difficulty of obtaining information

간단하게라도 힘든 점이나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일상, 괴롭힘 당한 일이나 목격한 일을 기록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사망노동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시신 훼손이 심해서 사망자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사업장을 통해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포비자F4, 고용허가제E9 등의 비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 지문등록을 하고 가족정보 등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경찰, 법무부가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공유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도 있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노동자가 미등록노동자라면 외국인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정보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사망노동자가 파견업체나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었다면 사업장에서는 더욱 작업자의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누군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유족과의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이나 고용노동부도 본국(송출국) 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되, 직접 사업장 동료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거주지도 확인하고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대사관보다는 동료, 지인을 통해 가족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about the deceased. Depending on the type of accident, it may take time to confirm the worker's identity due to the condition of the body. In some cases, no information can be obtained through the employer at all.

Workers who hold visas such as the F-4 (Overseas Korean) or E-9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required, upon entering South Korea, to register their fingerprints and submit family informa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a fatal accident occur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e, and Ministry of Justice can share this information if needed, and the worker's residence card can be used to verify their identity.

However, if the deceased worker was undocumented, they would not have a residence card. In such cases, workplaces are not interested in accurate records of their workers, and if the worker was employed through a dispatch or subcontracting company, the main workplace is even less likely to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m.

In addition to identifying who the deceased is, it is essential to contact their family. This usually requires a formal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police o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ll typically request confirmation from the deceased's home-country embassy. While proceeding through the embassy, one should also work to obtain information directly from coworkers at the workplace, confirm the place of residence, and check through migrant communities. In many cases, families can be identified and contacted more quickly through coworkers or acquaintances than through embassy channels.

Support for E-9 Visa Workers in Case of Suicide

- This support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that compensation under the IAC Insurance or accident insurance does not apply in cases of suicide.
 - * However, considering that suicide can, depending on circumstances, be recognized as an industrial accident, this underlying assumption should be reconsidered.
- After the embassy of the home (sending) country completes the funeral procedures, an application for funeral expense support can be filed with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Up to 3 million KRW can be provided to cover funeral expenses.

| E9비자 노동자의 자살사망 지원 |

- 자살 사망노동자의 경우는 산재나 상해보험의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마련된 지원제도다.
* 자살도 상황에 따라 산재인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 본국(송출국) 대사관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장제비 지원신청을 하면, 300만원 한도로 실제 사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장제비 지원신청을 하려면 장례비용과 유해송환비용으로 나눠서 신청해야 하고, 필요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 인근로자 사망사고 수습 및 장례지원 안내)

사고 경위와 원인 확인을 위해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는 가능한 가봐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정리된 경과가 없겠지만 사고 현장을 직접보고,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사고 정황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노동부를 통해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게 되지만 미흡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사고가 나는 순간을 만들어낸 ‘사고 이전 시간과 환경’을 알아내야 완성됩니다. 그 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연대자들과 동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고현장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증언자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퇴사했지만 그 사업장을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현제도 근무하는 정주-이주노동자들을 만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인 정

- When filing for funeral expense support with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he costs must be itemized into funeral expenses and repatriation expenses.
- The required forms can be found 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website, under the section titled "Guidelines for Handling Death Accidents and Funeral Support for Foreign Workers"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 수습 및 장례지원 안내).

Visit the Accident Site to Verify the Circumstances and Causes

It is important, whenever possible, to visit the accident site.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there may be no clear summary of events, but by seeing the site firsthand and meeting coworkers, it may be possible to reconstruct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Although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vestigate the cause, their findings are often insufficient.

To uncover the true cause of a fatal accid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ime and conditions leading up to the moment of the accident. For this process to be effective, the participation of support groups and coworkers is essential.

It may also be helpful to put up banners near the accident site and seek witnesses. You can try to find people who previously worked at the same workplace, even if they have since left, and continue reaching out to current workers, both local and migrant, who are still employed there.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gathered in this way can help disprove the employer's claim that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victim's mistake.

If, upon visiting the workplace, you find that the accident site has already been cleaned up, that act itself is illegal. You should report it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during the investigation, demand that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the accident scene be examined. You can also file a complaint or petition to ensure that such illegal acts are punished.

보와 자료가 사망사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업주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찾아갔을 때 사고현장이 깨끗이 치워져 있다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사고현장 훼손의 의도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조사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고소 고발하거나 촉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삶·문화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산재사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사업주에 대응하는 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삶’의 배경입니다. 남은 가족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규정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대응과정을 통해 남은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살아온 문화나 가족들의 종교·장례 문화를 고려하지 못해 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일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장을 금기시하는 문화권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화장한다면 가족들이 유골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대응을 할지는 조건에 따라 판단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 과정을 통해 사업주나 사업장을 법적으로 처벌

Be sure to verify the victim's life and culture

No less important than understand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worker who died in an industrial accident and responding to the employer is grasping the background of the worker's life. The deceased may have held a religion different from that of the surviving family. The family relationships may not be in a legally defined form. They may have been the only person supporting a large extended family, or someone who had only just begun economic activity.

Although the response process to an industrial-fatality case cannot resolve the surviving family's problem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the migrant worker's own culture or the family's religious and funeral custom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re can be cases where it becomes difficult even to return the deceased to the family's care. For example, if a migrant worker from a culture that forbids cremation dies in South Korea, and cremation is carried out without regard to this, the family may refuse to accept the ashes.

Decide Whether to Pursue Legal Ac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rough the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police, there will be a process to legally punish the employer or the workplace. Separate from that process, it is up to the support groups (or assisting organizations), or the support groups together with the bereaved family, to decide whether to file a formal accusation or complaint against the company or the employer.

You may consider filing a complaint in the following situations: when the investigation is progressing too slowly; when certain parties who should be held accountable are excluded from the investigation; when it is unclear whether problematic behavior by the company is being investigated; or when it is necessary to record the testimonies and evidence of support groups, coworkers, and family members so that they can be submitted during the trial.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것과 별도로 연대자(조력단체)가 또는 연대자와 유족이 회사나 사장을 고소고발할 건지는 판단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빠졌거나, 문제가 되는 회사측의 행태가 수사되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때, 연대자와 동료 그리고 유족의 증언과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재판에서도 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입니다.

유족의 고소, 연대자와 동료들의 고발은 하지 않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 조건상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유족이 한국에 없는 경우라면 고소 이후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고소 고발은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같이 대응하면서, 법률대리인으로 역할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동료들의 상황과 조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동료들에 대해서도 살펴 봐야 합니다.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업장 이전을 원하는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지 등의 후속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상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의 요구는 같이 잘 논의하고 정리해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In most cases, filing a complaint by the bereaved family, or a report by support groups and coworkers, is more helpful than not taking action, so it is best to discuss and decide together. However, depending on the family's situation, the bereaved may feel afraid or hesitant to initiate a legal complaint. If the family does not reside in South Korea,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explain in detail what kind of legal process this entails, what its significance is, and how communication will be maintained after the complaint is filed. Therefore, it is most effective to share information fully and coordinate closely, pursuing the case together with a lawyer who can act as a legal representative throughout the process.

Carefully Assess and Support the Situation of the Victim's Coworkers

It is also important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coworkers who must continue working at the workplace where the fatal accident occurred. Discuss whether they wish to remain at that workplace, want to transfer to another, or require trauma counseling or other follow-up measures.

It is best to talk through these issues together, carefully summarize their concerns, and relay their opinions to the employer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articipating together in any discussions or negotiations.

There may be legal limitations. For E-9 visa holders, the requirements for changing workplaces should be reviewed in advance. In general, a transfer is permitted when there is business closure, unpaid wages, human rights violations, or when the employer resigns or is replaced, though obtaining the employer's consent can often be difficult. One possible approach is to raise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unsafe and poor working conditions that existed at the workplace where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and to request that the employer resign. Even then,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how many times the worker has already changed workplaces and what industry they are currently employed in.

If the coworker was working under a D-2 (Student) visa, first confirm with them whether they had received approval from their school and from immigration authorities to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E9비자의 경우 사업장변경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폐업, 임금체불, 인권침해, 고용주의 퇴사 처리가 있으면 사업장변경은 기능하나 사업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존재했을 수 있는 인권침해나 사업장의 좋지않은 환경 등을 제기하며 고용주의 퇴사 처리를 요구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몇 번째인지 업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료가 D2비자로 일하고 있던 경우라면 학교와 출입국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먼저 당사자에게 확인해보고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나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했다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 출국 명령이 내려지거나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의 제한이나 노동시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장을 이동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없는 편이지만, 학교와 출입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work. If they were working part-time without reporting it to the school or immigration office, they may be subject to a fine, or in some cases, to a departure order or forced deportation. Although industry and working-hour restrictions apply, changing workplaces is generally less restricted for student visa holders. However, they must report the change to both their school and immigration authorities.

5

그 외 고려사항

피해자의 유품을 찾아서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피해자와 유족이 한국에 함께 살고 있었다면 일하던 사업장에 남아있는 사망피해자의 물품을 정리해서 유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이 와서 유품을 정리해가서 수사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고 분석할 것입니다. 특히 핸드폰이 있으면 가져가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유품은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 그래도 만약 불안하다면 담당 경찰(유족 조사 등으로 사고 초기에 연락할 것이니 연락처를 꼭 챙겨두세요)에게 언제 유품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경찰이 가져간 유품 말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물품은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사망사고 발생 후 연대자들과 유족이 회사를 방문 할 때 사망피해자가 일했던 사고 현장을 보는 것과 함께 일하던 다른 장소, 휴게장소, 사무실, 탈의실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회사에 남아있는 사망피해자의 물품(옷, 신발, 수첩 등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Other Considerations

Locate the Victim's Belongings and Ensure They Are Delivered to the Family

If the victim and their family were living together in South Korea, the deceased worker's belongings that remain at the workplace should be gathered and delivered to the family. When a fatal accident occurs, the police will arrive first and collect the victim's possessions to determine whether any of them are needed for the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f the worker's cell phone is found, it will likely be taken for data review and analysis.

After the police investigation concludes, the belongings are returned to the bereaved family. If you are uncertain about the process, contact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you will likely have their contact information from the initial investigation or family interview) and ask when and how the belongings will be returned. However, there may also be personal items left at the company that the police did not collect. These should be requested directly from the company.

When the family or support groups visit the workplace after the accident, they should not only view the accident site, but also check other locations where the deceased may have worked or spent time such as other work areas, rest areas, offices, or changing rooms, to ensure that personal belongings (clothing, shoes, notebooks, etc.) are identified and recovered.

5 그 외 고려사항

유족과 연대자들이 나서지 못하는 경우는 동료들이 챙겨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전달하는 물품만 유품으로 남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피해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유가족들은 본국에 있다면 사고 연락을 한 동료에게 유품을 챙겨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면 똑같이 유품을 꼭 받고자 한다고 유가족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물품까지 챙겨야 할지는 다른 이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니 꼭 챙기고 싶은 것(사진, 일기, 핸드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사업장만 살펴볼 수도 있고,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가져간 유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챙겨가지 않은 유품이 작업장, 피해자의 거주지에 남아있으면 동료들과 연대자들, 지인들이 챙겨주어야 합니다.

늦게라도 유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사전에 동료들, 연대자들, 지인들이 챙겨둔 유품을 전달받으면 되고, 경찰이 가져간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유품은 피해자의 시신이 본국으로 송환될 때 함께 보냅니다.(대사관이든 지인이든 시신 송환을 도와주는 이에게 유품을 함께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유가족이 본국에 있다면 다른 이들의 챙김이 있어야 유품 수습과 정리, 전달이 가능합니다.

시신 안치와 송환을 위해

회사에 장의비로 요구해봅시다

장례절차가 미뤄지면 시신은 시신 안치실에 냉동 보관됩니다.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고 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If the family or support groups are unable to do this, coworkers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gather and deliver the belongings. Otherwise, only the items returned by the police will remain as the victim's personal effects.

If the victim was working in South Korea while the bereaved family resides in the home country, the family should ask a coworker who reported the accident to gather the victim's belongings. When contacted by the embassy, the family should clearly express their wish to receive the belongings.

Because it can be difficult for others to know which items hold personal or emotional importance, the family should specifically mention what they wish to keep, for example, photos, diaries, cell phones, and other items of personal significance.

The police investigation may cover only the workplace, or it may also extend to the victim's place of residence. When the investigation concludes, the belongings taken for investigation must be returned.

If any personal items remain at the workplace or the victim's residence that the police did not collect, coworkers, support groups, or acquaintances should gather and safeguard them.

If the family later travels to South Korea, they can receive the belongings in person from the coworkers or support groups and those returned by the police. However, if the family cannot come to South Korea, the belongings are sent along with the repatriation of the body. In that case, the family should ask the person or organization assisting with the repatriation, whether it is the embassy or an acquaintance, to include the belongings together with the remains.

If the family lives abroad, it is only through the care and efforts of coworkers, support groups, and acquaintances that the collection, organization, and delivery of the victim's belongings can take place.

Request Funeral Expense from the Company for Body Storage and Repatriation

If the funeral process is delayed, the body is kept in cold storage at a morgue. It is possible to store the body without holding a funeral ceremony or setting up a mourning

5 그 외 고려사항

이후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하는 곳을 찾아 맡기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신은 화장하는 경우와 유해를 송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가족들의 염원으로 유해송환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유해 송환을 하기로 했다면 인천공항을 통해 유해 송환을 하는 업체를 찾는 것과 동시에 본국에서 시신을 받을 사람도 정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유해 송환은 방부처리부터 항공료까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한국의 법과 제도에서는 시신 송환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송출국 대사관에서 장제비 지원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조건이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동료들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돈을 모아 본국으로 시신을 송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사회단체·노조 등이 회사와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신 안치 비용과 송환 비용을 장의비 항목으로 회사측에 요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 입국 전에 필요 조치들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비자로 들어오든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할 시기부터 본국과 한국에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미등록노동자가 된다고 해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을 통해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한국 소식을 대사관을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room.

To repatriate the body to the home country, several documents are required, and preparing the necessary paperwork in South Korea can take considerable time. For this reason, families or support groups sometimes entrust the process to agencies that specialize in funeral or repatriation services.

There are generally two options: cremation or repatriation of the remains. Cremation is relatively simpler and less costly, but in many cases, repatriation is chosen out of religious conviction or the wishes of the family.

If repatriation of the remains is decided, it is necessary to arrange a repatriation service provider, usually throug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at the same time designate a person in the home country who will receive the remains. The cost of repatriation is high, covering embalming, processing, and air transport. Currently, under South Korean law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ere are no official regulations that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body repatriation. In some cases, the embassy of the sending country may apply to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for funeral expense assistance, but eligibility for such support is limited. For this reason, coworkers, support groups, and local communities sometimes collect money together to make it possible to repatriate the body to the home country.

When the bereaved famil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labor unions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company, it is essential to demand that the costs of body storage and repatriation be included as funeral expenses to be covered by the company.

It Is Best to Take Certain Preparatory Steps Before Entering South Korea

Regardless of the type of visa,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mergency contact network connecting both your home country and South Korea before entering the country for work.

Even if you later change workplaces or become undocumented, having a way for others to receive and relay information on your behalf in an emergency allows for a faster and more effective response.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연계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가족들도 그곳을 통해 한국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거나, 한국에 입국한 후 관계맺음을 하게 되는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다면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왜곡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가족들이 걸러서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If possible, it is also helpful to have channels of communication beyond the embassy through which you can receive news from South Korea. If you are connected to a community or organization before coming to South Korea, it is good for the families to be in contact with that group so they can receive updates. Likewise,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when you build relationships with local groups or communities, it is wise to introduce them to your family.

That way, in case of an unforeseen event, your family can filter out false or distorted information and make informed judgments based on accurate reports.



4

사고치료 대응

- ① 산재사고 발생 시 대응 | 108
- ② 산재 신청절차와 준비 | 114
- ③ 산재 치료가 끝난 후 대응 | 122



4 Response to Accident Treatment

- ① Response When an Accident Occurs | 109
- ② Procedures and Prepar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laims | 115
- ③ After Treatment Ends | 123

1

산재사고 발생 시 대응



사고가 나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옆에 동료가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는 소리를 질러 사고당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통해 사고 사실을 회사에도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료에게 부탁해 사고 발생 지점, 기계 등 상황을 복원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사진을 많이 남기도록 합니다.

부상을 가볍게 여기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병원에 굳이 안가도 된다고 한의원에서 치료만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못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병원 진료를 통해 진료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산재신청에 유리합니다. 사고 즉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사업장 변경을 위한 거짓 신고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 대비해 119와 병원의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

Response When an Accident Occurs



It Is Important to Leave a Record When an Accident Occurs

When an accident occurs, the first step is to call 119 and request emergency rescue. If a coworker is nearby, that is fortunate. However, if you are working alone in an isolated area, you must shout or make noise to alert others that an accident has occurred. You should then immediately inform the company of the incident through your supervisor or site manager. It is also important to document the scene. Ask a coworker to take as many photos as possible of the site of the accident, the equipment involved, and the surrounding conditions, as these records can later help reconstruct the situation.

Sometimes, injuries are dismissed as minor, and workers choose not to go to the hospital, or the company tells them it is not necessary and sends them to a traditional clinic instead, or even prevents them from seeking hospital treatment. However, it is crucial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t a hospital so that a medical record is created—this record will be important evidence when filing for an IAC Insurance claim later. If you fail to respond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various problems can arise. Some employers suspect a migrant worker's IAC Insurance claim as a false report made to request a workplace transfer. For this reason, the records from 119 and the hospital serve as essential evidence in protecting your rights.

사고 원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가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안전장치라는 게 있었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위험할 때는 대응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등은 평상시 일하는 사업장을 잘 체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사고가 나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끔 산업재해조사표를 회사가 작성하면서 작업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기 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있으면 그 사람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산재를 당한 당사자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확인하고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한글을 잘 모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받아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나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에 의뢰해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국어로 된 재해조사표를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인을 해버리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세요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신청 외에 공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상처리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한국국적 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인데 반대, 공상처리는 국가 대신 회사와 합의를 보는 일이고,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Make Sure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Accident

To understand the cause of an accident, you should review whether there were any existing problems with the machinery, whether safety devices were installed, and whether workers regularly received safety training on how to perform tasks and what to do in dangerous situations. These details, which can be identified by closely examining the everyday conditions of the workplace, are crucial for determin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When an accident occurs, the employer is required to submit an Industrial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owever, it is not uncommon for companies to fill out the report in a way that blames the worker's carelessness or negligence as the sole cause. Before the report is submitted to the Ministry, it must be reviewed and confirmed by the workers' representative, if one exists. If there is no workers' representative, the injured worker, a family member, or a legal representative may review and sign the report instead.

If you do not understand Korean well or work in a small workplace without a labor union, you should obtain a copy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and ask a migrant worker support group or labor rights organization to review it carefully before you sign. You may also request a version of the report translated into your native language from the company. Never sign the report without reviewing or understanding its contents, as doing so could lead to disadvantages later on.

File for an IAC Insurance Claim

When an industrial accident occurs, there are two ways to handle it: by filing for a claim under the IAC Insurance, or by settling privately with the employer, known as “gong-sang”(공상) in Korean. However, private settlements are not recommended. The IAC Insurance is a legal right guaranteed to all work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visa status, whether South Korean or migrant. In contrast, private settlement means reaching an agreement directly with the employer instead o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r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사업주들은 흔히 공상처리를 제안합니다. 공상처리가 더 이득이다, 산재처리는 절차가 복잡하다, 미등록노동자는 신청 중에 단속될 수 있다는 등 겁을 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회유에 순순히 넘어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미등록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먼저 공상으로 처리하면 충분히 치료를 받는 기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 기간을 단축하거나 빨리 작업 복귀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치료가 끝난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장애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지지는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게 뻔합니다. 또한 상태가 악화했을 때는 작업중 발생한 사고때문이라는 근거가 없어서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상보다 산재보험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산재치료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강제출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일터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재요양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personally pays for medical treatment and compensation.

When migrant workers are injured, employers often suggest private settlements, claiming that it is more beneficial, that the IAC Insurance procedures are too complicated, or that undocumented workers might be caught during the process. Some employers even threaten to fire the worker or report them for being undocumented if they refuse to agree.

Private settlements create many problems. First, when handled privately, it is difficult to ensure sufficient time for full treatment. In many such cases, companies have unilaterally shortened recovery periods or pressured workers to return to work early. Moreover, after a private settlement, employers typically refuse to take responsibility for any aftereffects or disabilities that appear later, offering various excuses. If the condition worsens, there is no official record proving that the injury was caused by an industrial accident, making it impossible to receive further compensation. For these reasons, filing for a claim under the IAC Insurance is strongly recommended over a private settlement.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 accident-related treatment, dismissal is prohibited, and forced deportation is not allowed. This is both the principle and the official stance of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medical treatment system is to help injured workers recover physically and mentally, so that they can return to their workplace and to society.

2

산재신청 절차와 준비



이주노동자의 본국어로 된 요양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요양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사인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본국어로 된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신청서 외에 필요한 것은 의사 진단서(소견서)입니다. 자세한 사고경위서, 동료진술서는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산재요양신청은 산재 지정의료기관에서 하면 편리합니다

산재 발생으로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신청을 할 때 산재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요양신청서를 병원에 내면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고,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과정을 산재 지정의료기관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긴 합니다.

2

2 Procedures and Prepar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laims

Procedures and Prepar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laims



Application Forms for IAC Treatment Claims Are Available in Migrant Workers' Native Languages

To file for an IAC Insurance claim, you must complete a Treatment Application Form (요양신청서) by providing the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the name of the workplace, and a description of how the accident occurred. The applicant (*injured worker*) must then sign the form. The Treatment Application Form can be easily obtained from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r from designated hospitals. You can also request a version of the form in your native language by contacting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 1588-0075).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form, you will need a doctor's note. It is also helpful to include a detailed accident statement and written testimonies from coworkers, if available.

It Is More Convenient to File for Industrial Accident Treatment at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for an industrial accident, it is convenient to submit the IAC Insurance Treatment Application at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When you submit the Treatment Application Form to the hospital, the doctor will issue a written medical opinion, and the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may also submit the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이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1개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는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일 뿐 사업주가 산재이냐, 아니냐를 판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 요양 기간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를 당하면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와서 일하라는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G-1 비자로 머물 수 있습니다

당장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산재를 겪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등록노동자라면 병원이나 관공서 이용이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G-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mpleted documents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n your behalf. It is also possible to file the application online, if preferred.

In some cases,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a general hospital can handle this procedure for you. For reference,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perates 11 hospitals nationwide, which are public institutions known for their high reliability and trustworthiness.

Filing for IAC Insurance Does Not Require the Employer's Consent

When an industrial accident occurs, the worker has the right to file for IAC Insurance directly with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Employer consent or approval is not required for an IAC Insurance claim. The employer's role is merely to assist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they have no authority to determine whether an accident qualifies for IAC Insurance coverage. Even if the employer tells you not to file an IAC Insurance claim, you should ignore such instructions and submit your application directly to either the hospital or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Workers Cannot Be Dismissed During the Industrial Accident Treatment Period

When an industrial accident occurs, workers need time to recover. During the treatment and recuperation period, dismissal is strictly prohibited. According to Article 23, Paragraph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 employer shall not dismiss a worker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from work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an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and for 30 days thereafter." Therefore, workers should not feel pressured or intimidated by an unreasonable demand from the employer to return to work early.

You Can Stay in South Korea on a G-1 Visa

② 산재 신청절차와 준비

E-9 비자 등을 소지한 사람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이 난 미등록노동자도 해당합니다. 이때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고, 보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E-9 비자 이주노동자도 G-1 비자 기간 종료 후 체류자격 잔여기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복지센터)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승인이 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등록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신분,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찮다고 신고 안 하고 일했다가 산재를 당하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비자 연장과 변경을 불허할 수도 있고,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면 적발 시 바로 출국명령이 떨어집니다.

산재 승인 시 건강보험이 없어도 급여 수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로 치료비를 비싸게 처리하는 병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없어도 산재

What should you do if you experience an industrial accident just before your visa expires? Wouldn't it be difficult or intimidating for an undocumented worker to use hospitals or government offices? Fortunately, workers undergoing Industrial accident-related treatment or filing for an IAC Insurance claim, as well as their families, can apply for a G-1 visa. This applies not only to workers holding an E-9 visa, but also to undocumented workers whose Industrial accident-related treat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n such cases, fines for illegal stay are waived, and no guarantor is required. Moreover, migrant workers on an E-9 visa, who are normally prohibited from changing workplaces, may apply for a workplace transfer after their G-1 visa period ends, using the remaining period of their original visa statu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when "a foreign worker becomes unfit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business or workplace due to injury or other reasons, but is deemed fit to work at another business or workplace," the worker may apply to the head of the employment security office (Employment Welfare Center) for a transfer to another workplace. However, this is permitted only if Industrial accident-related treat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 (Article 25(1)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Article 30(1) of its Enforcement Decree)

Students holding a D-2 visa must also take special care. Just like undocumented workers, they are entitled to Industrial accident-related compensation regardless of visa status if they are injured while working. However, D-2 visa holders must obtain a "part-time work permit" from the Immigration Office before taking on any job. If they skip this step and later suffer an industrial accident, the situation can become very difficult. They may face fines, denial of visa extension or change, or even forced deportation. In particular, if a student has been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a departure order is issued immediately upon detection.

When IAC Insurance Is Approved, the Standard Medical Fee Rate Applies Even Without Health Insurance

② 신제 신청절차와 준비

를 승인받았다고 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보다 치료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면 병원에서 비급여 처리했거나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국제수가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There are occasionally hospitals that charg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excessively high treatment fees, claiming that their care must be billed as non-covered medical expenses because they are not en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owever, once an IAC Insurance claim is approved, hospitals are required to apply the standard medical fee rates, the same as those used for insured patients, for all covered treatment items. If the treatment cost is far higher than expected, it may be because the hospital classified the treatment as non-covered or applied international fee rates, which hospitals can set at their own discretion. In such cases, you should raise the issue directly with the hospital and request a correction.

3

산재치료가 끝난 후 대응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은 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했으나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재보험으로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신청 절차는 처음 산재보험 신청할 때와 똑같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뒤 진단받았을 때 전에 하던 작업과 관련이 있다면 본국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국의 EPS센터에서 산재보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만 본국에서 가능하고, 치료는 꼭 한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합니다. 본국에서 치료받고 그 치료비를 한국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EPS센터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추가치료를 위한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상이 다 끝나서 본국으로 귀국한 뒤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때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니 귀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

3

3 After Treatment Ends

After
Treatment Ends

It Is Possible to Apply for Additional Industrial Accident-Related Treatment from the Home Country

Even after treatment has officially ended, a condition may relapse. In such cases, additional industrial accident-related treatment can be covered under the IAC Insurance. The application procedure is the same as when filing for the initial IAC Insurance claim. If, after returning to your home country, you are diagnosed again and the illness or injury is found to be related to the same work you were doing before, you may file for IAC Insurance from your home country. In that case, the IAC Insurance application form must be submitted through the EPS Center in your home countr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ile the application can be made from abroad, the treatment itself must be received in South Korea. You cannot receive treatment in your home country and then claim reimbursement from South Korea for those expenses.

※ EPS Center: Employment Permit System (www.eps.go.kr)

It Is Best to Prepare the Necessary Documents for Additional Treatment in Advance

After IAC Insurance compensation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and you have

③ 산재 치료가 끝난 후 대응

사소견서, 산재요양서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재입국이 필요할 때 이 서류들과 여권을 가지고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있는 연대자(조력자)들이 비자 발급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따라서 빠른 상황 파악과 민원 제기에 대비해 믿을 만한 한국의 동료나 지인에게 본인의 산재 관련 서류 사본, 의사 진단서 사본을 맡겨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법도 있습니다

산재보상만으로는 피해보상이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재해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그동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쉽게 말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 않고 정부에서 책임지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 발생의 책임이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시설이 문제였다거나 기계가 오작동했다는 등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청구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도 있으니 우선 믿을 만한 곳

returned to your home country, your condition may worsen or you may need another surgery. In such cases, you can re-enter South Korea to receive additional treatment. Since there are specific conditions for obtaining a reentry visa, it is important to prepare the necessary documents before returning home. You should keep a doctor's written opinion, document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related treatment, and, if you have a disability, it is advisable to obtain a follow-up treatment card even if you do not plan to receive further treatment in South Korea.

When you need to apply for reentry, you must bring these documents and your passport to the South Korean embassy in your home country.

Reentry visa issuance procedures can be quite strict. In such cases, support groups in South Korea may file civil petitions to help resolve the difficulties related to visa issuance. Therefore, it is a good idea to entrust copies of your IAC Insurance-related documents and copies of your doctor's medical statement to a trusted coworker or acquaintance in South Korea in advance, so that they can respond quickly and assist with any necessary petitions or paperwork.

You May Also File a Civil Lawsuit for Damages

Sometimes, IAC Insurance compensation alone may feel insufficient to cover the full extent of the harm suffered. By filing a civil lawsuit for damages against the employer in court, the victim (or the family) may receive compensation for actual financial losses, as well as additional compensation for emotional suffering.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AC Insurance operates under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provides compensation without determining who was at fault. In contrast, civil damage claims require identifying who was responsible for causing the accident.

Therefore, when filing a civil lawsuit for damages, you must prepare your own evidence proving the employer's negligence. For example, evidence showing that safety facilities were inadequate or that the machinery malfunctioned is required.

Civil damage claims must be fil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dustrial accident. Before filing a lawsuit,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 claim is legally

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부록에 다 실리지는 않았지만, 각 지자체의 이주민 주민시설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주민을 돕는 공익변호사단제도 제법 많습니다.

possible, and estim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at can be sought. For this reason, the assistance of a legal expert is essential. Legal fees for hiring a lawyer can vary widely, and brokers may try to intervene, so it is advisable to first seek legal consultation from a trustworthy source. Although not exhaustive, the appendix lists local government facilities and public-interest lawyer organizations that provide free legal counseling and support for migrants.



이주노동자 조력 기관·단체 목록

권역	기관/단체명	제공 서비스	지원 언어 (한국어 외)	상담 전화	주소
서울	이주민센터 친구	- 산재 상담 - 법률 구조	영어	02 6406-7179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57, 2층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 산재 상담 - 다국어 통역 - 고용주 교섭	영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02 2285-606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0, 201호
	이주민센터 동행	- 산재 상담 - 다국어 통역	베트남어	02 338-189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19-19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 산재 상담 - 다국어 통역	영어, 일본어	02 6207-93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81, 아주빌딩 제302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 산재 상담 - 다국어 통역 - 쉼터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02 924-2706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95 노동사목회관 4F
	(사)김용균재단	- 산재 상담 - 고용주 교섭 - 진상규명 등 대응		02 833-1210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경인디지털밸리 2차 1021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산재 상담 - 산재 신청 대행		02 3496-5067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4-2 가산한화비즈메트로 2차 1001호
경기	의정부 이주노동자센터	- 산재 상담 - 산재 신청 대행	네팔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031 875-9111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95, 3층
	사단법인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	- 산재 상담 - 산재 신청 대행	필요시 통역 연결	070 4120-277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 3길 34-6, 5층



Contact Information Organizations Providing Support

Administrative Attorneys for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Phone No. 02-6207-9364 | Language: English, Japanese

Address: 302-ho, 81 Supyo-ro, Jongno-gu, Seoul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Busan Foreign Residents Center

Phone No. 051-304-0900 | Language: English, Chinese(Mandarin), Vietnamese, Burmese

Address: 3F, 448 Sasang-ro, Sasang-gu, Busan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nd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Chungnam Labor Health and Human Rights Center – Saeumteo

Phone No. 041-663-7780 | Language: None

Address: 101-ho, 73 Yulji 19-gil, Seosan-si, Chungcheongnam-do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Gong-gam Center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GCOEM)

Phone No. 070-4120-2773 | Language: Connects to Interpreter Activists

Address: 5F, 34-6 Haengjeongseo-ro 3-gil, Hyangnam-eup, Hwaseong-si, Gyeonggi-do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nd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Gumi Catholic Migrant Workers Center

Phone No. 054-455-2816 | Language: English, Vietnamese, Tagalog(Sundays Only)

Address: 28 Baeksan-ro, Gumi-si, Gyeongsangbuk-do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Employer Negotiation, and Emergency Support(Medical and Living Expenses, etc.)

kbu Migrant Center

Phone No. 054-858-2260 | Language: English, Vietnamese

Address: 19 Okdong 1-gil, Andong-si, Gyeongsangbuk-do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Employer Negotiation, and Emergency Support(Medical and Living Expenses, etc.)

Gyeonggi Immigration Society Bureau

Phone No. 010-3329-5180 | Language: English

Address: Immigrant Society Bureau, 4F, Annex Building, Northern Provincial Office, 1 Cheongsa-ro,
Uijeongbu-si, Gyeonggi-do

Phone Counsel

Service: Administrative Support

경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살림의집	- 산재 상담 - 다국어 통역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	031 942-3760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9, 2-3층
	경기도청 이민사회국	- 행정지원	영어	010 3329-51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북부청사 별관 4층 이민사회국
	이주민연대 살림의 집	- 산재 상담 - 다국어 통역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타갈로그어, 우르두어, 힌디어	031 571-2005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4, 3층
	반월시화공단 노동조합 월담	- 산재 상담		031 491-246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공영주차장 끝 컨테이너)
영남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 산재 상담 - 산재 신청 대행 - 고용주 교섭 - 긴급지원(의료비 등)	영어, 베트남어	054 858-2260	경북 안동시 옥동1길 19 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 내
	울산이주민센터	- 산재 상담 - 산재 신청 대행 - 고용주 교섭 - 긴급지원(의료비 등)		052 297-1282	울산시 북구 염포로 581, 4층
	구미 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	- 산재 상담 - 산재 신청 대행 - 고용주 교섭 - 긴급지원(의료비 등)	영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054 455-2816	구미시 백산로 28
	부산광역시 주민지원센터	- 산재 상담 - 다국어 산재신청 대행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051 304-09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48, 3층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 산재 상담 - 고용주 교섭		053 585-6200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72길5, 4층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 산재 상담		052 288-3356	울산시 북구 양정동6길 34-3 (양정동, 2층)

Jeonnam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Network

Phone No. 010-3371-0380 | Language: English, Chinese, Vietnamese, Mongolian

Address: 58567 702-ho, 74 Namak 3-ro, Samhyang-eup, Muan-gun, Jeollanam-do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Employer Negotiation, Shelter Provision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Emergency Support(Medical and Living Expenses, etc.)

Kim Yong Kyun Foundation (KYKF Inc.)

Phone No. 02-833-1210 | Language: None

Address: 1021-ho, 184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Phone Counsel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Employer Negotiation,
and Industrial Accident Investigation and Response

KMWU Sungseo Industrial Complex Trade Union

Phone No. 053-585-6200 | Language: None

Address: 4F, 5 Seongseo-ro 72-gil, Dalseo-gu, Daegu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nd Employer Negotiation

Masan Changwon Geoje Movement Association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Phone No. 055-267-0489

Language: Collaboration with the Busan Foreign Resident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Center

Address: 48 Yeondeok-ro 184beon-gil,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and Employer Negotiation

Migrant Center Dong Hanh

Phone No. 02-338-1899 | Language: Vietnamese

Address: 19-19 World Cup-ro 13-gil, Mapo-gu, Seoul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Migrant Center Friend

Phone No. 02-6406-7179 | Language: English

Address: 2F, 157 Daerim-ro, Yeongdeungpo-gu, Seoul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nd Legal Assistance

Migrant Pastoral Committee

Phone No. 02-924-2706

Language: English, Chinese(Mandarin), Vietnamese, Mongolian, Spanish, Bahasa Indonesia

Address: 4F, 95 Bomun-ro, Seongbuk-gu, Seoul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nd Shelter Provision

Migrants Trade Union

Phone No. 02-2285-6068 | Language: English, Nepali, Bengali

Address: 201-ho, 50 Digital-ro 33-gil, Guro-gu, Seoul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nd Employer Negotiation

영남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산재 상담 - 산재 신청 대행 - 고용주 교섭	필요시 통역 연결	055 267-0489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48
호남	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 산재 상담 - 다국어 통역 - 산재 신청 대행 - 고용주 교섭 - 긴급지원(의료비 등) - 쉼터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010 3371-038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3로 74 유평프라자 702호
	완주외국인 지원센터	- 산재 상담 - 다국어 통역 - 고용주 교섭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스리랑카어	063 263-1033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48 동창햇살창조센터 3층
충청	충남노동건강 인권센터 새움터	- 산재 상담		041 663-7780	충남 서산시 읍지19길 73 101호

Paju Shalomhouse Migrant Worker Center

Phone No. 031-942-3760 | Language: English, Vietnamese, Khmer, Filipino, Burmese, Sinhala, and Tamil

Address: 2-3F, 9 Mamuri-gil, Paju-si, Gyeonggi-do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Shalomhouse – Migrant Solidarity

Phone No. 031-571-2005 | Language: Vietnamese, Bengali, Tagalog, Urdu, Hindi

Address: 3F, 4 Gyeongbokdae-ro, Onam-eup, Namyangju-si, Gyeonggi-do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Phone No. 02-3496-5067 | Language: None

Address: 1001-ho, 43-14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nd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Uijeongbu Migrant Workers Center

Phone No. 031-875-9111

Language: Nepali, Burmese, Bahasa Indonesia, and Others through Phone Interpreters

Address: 3F, 95 Gyeongui-ro, Uijeongbu-si, Gyeonggi-do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nd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Ulsan Migrant Center

Phone No. 052-297-1282 | Language: None

Address: 4F, 581 Yeompo-ro, Buk-gu, Ulsan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Assistance with Filing IAC Insurance Claims, Employer Negotiation, and Emergency Support(Medical and Living Expenses, etc.)

Ulsan Movement Association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Phone No. 052-288-3356 | Language: None

Address: 2F, 34-3 Yangjeong 6-gil, Buk-gu, Ulsan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Wanju Foreign Residents Support Center

Phone No. 063-263-1033

Language: Chinese(Mandarin), Vietnamese, Nepali, Kyrgyz, Russian , Khmer, Bengali, Uzbek, Sinhala, and Tamil

Address: 3F, 148 Bongdong-ro, Bongdong-eup, Wanju-gun, Jeonbuk-do

Service: Multilingual Interpretation,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Employer Negotiation, Grievance and Daily Life Counseling, Korean Cultural Experiences, Volunteer Program Management, Self-Help Group Support,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Woldam Union

Phone No. 031-491-2460 | Language: None

Address: 462 Jungang-dae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the Container at the end of the Public Parking Lot)

Phone Counsel

Service: Counseling(Procedural and Legal Guidance)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안내서**

**A Guidebook for Migrant Workers
: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Injuries and Deaths)**

